政治體制의 葛藤과 統合에 關한 理念的 認識

—韓半島에서의 統一論의 模索—

陳 德 奎

Ⅰ. 머리말
Ⅱ. 이데올로기의 葛藤과 韓半島의 分斷
Ⅲ. 韓半島에서의 이데올로기적 存在 樣式
Ⅳ. 韓半島統合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模索
Ⅴ. 結論 : 統合이데올로기로서의 民族主義

Ⅰ. 머리말

이 글은 韓半島에서 政治體制의 統合을 전제로 하여 그것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데올로기의 영향과 그 성격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의 논의는 자연히 일정한 價値的 指向性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지향성은 무엇보다도 韓半島에서의 서로 다른 政治體制의 존립을 전제로 하게 되는데, 그러한 존재적 성격은 이데올로기 갈등의 현실적 첨예성을 의미하게 된다.

韓半島에서 서로 異質的인 체제가 존립하게 된 것은 전후 40여년간 國際關係에서 강대국적 이데올로기의 대결이 빚어놓은 極端的인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이데올로기적 갈등 자체가 戰後 冷戰體制의 不變的 屬性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전 세계적 대립의 縮約的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느 시기에는 兩體制 사이에서 和解의 일면이 나타나기도 했었지만, 또 다른 시기에는 이데올로기적 대결의 격렬한 상황이 표출되었던 때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하나의 불변적인 主潮는 한반도에서는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여전히 恒數로서 지속 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그 사이에도 한반도 내외에서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葛藤을 극복하고 분단된 현실의 異質的 體制를 통합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모색되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그러한 모색은 단순히 모색 그 자체의 의미 이상 부여받을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韓半島에서의 정치체제의 통합문제를 학문적인 관념의 대상으로 보기에는 그 내용에 보다 복합적인 현실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협상을 통하여 일거에 해결하기에는 그 분단의 뿌리에 역사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體制分斷의 현실성이 이처럼 복합적이고 역사적인 현실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접근하고 있는 최근의 움직임에서는 이상하게도 미래의 어떤 가능성에 대한 樂觀的인 인식논리가 시종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1]

이러한 樂觀論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學問的 理論의 차원에서 이데올로기의 초극과 체제 분단의 극복을 모색하는 적지 않은 이론과 주장이 개진되고 있는 일부 학계의 주장에서 엿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입론은 대부분의 경우 이미 일정한 가치적 논리의 귀결을 전제로 하면서 그것을 위한 논증에 치중하고 있다. 즉 이데올로기적 갈등은 그것이 마치 한국사회와는 본질적으로 무관한 것이었으나 强大國에 의하여 부과·강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민족이나 한국인과는 연관이 없는 사실로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갈등은 쉽사리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2]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달리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1) 이러한 性格의 가장 代表的인 것으로서는 최근에 政府에 의하여 發表된 일련의 北方政策을 들수 있다. 이것은 現實的 狀況에 대한 낙관론에다 그 바탕을 두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見解가 現實的으로나 民族의 統合이라는 관점에서 기여적인가하는 점은 여전히 問題로 남아 있다.

2) 최근 일부 社會勢力에 의하여 논의되고 있는 統一지향의 認識이 여기에 속한다. 특히 일부 宗教系의 統一에 관한 종교적 인식과 접근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것. 韓國基督教教會協議會, "民族의 統一과 平和에 대한 韓國基督教會 宣言", 1987.

한국의 現實社會에서는 이데올로기가 결코 외부의 것이 아닌 자기네 것으로 규정됨으로써 이제는 생활의 모든 영역을 규제하는 하나의 토대처럼 응고되고 말았다. 이들의 주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완전히 도외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논의에서는 可能性과 當爲性이 혼돈된 채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實踐의 方案같은 것도 유예된 채 논의를 단지 觀念的인 차원에서만 되풀이하는 일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되어야 할 사실은, 이러한 주장은 學問的인 객관성으로 논의되기보다는 이른바 한국의 국내적인 정치상황의 變革的 意圖를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실천적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3]

이데올로기적 樂觀論과 統合의 當爲性만을 역설하는 다른 하나의 인식은 일부 정치인들과 支配勢力의 일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분단을 극복하려는 어떤 本質的인 模索이나 그것을 위한 헌신에서 이러한 논리를 전개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계산과 영향력의 평가에 따르는 일종의 책략적 행동에서 취해진 태도의 일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현재의 집권세력의 경우는 집권의 상황적인 조건 때문에 그들의 취약한 권력기반을 鞏固化하기 위한 民衆的 지지의 확보를 전제하여 이러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권력을 장악한 집권세력은 그들 스스로가 이전의 군부·관료적 권위주의 체제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자기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리고 보다 진보적인 체제로서의 이른바 민중적 지향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서 분단 극복이라는 민족적 차원의 중요한 문제를 별다른 조건의 성숙이나 치밀한 연구검토 및 국민여론의 총합이라는 전제도 없이 단지 정치적 전

3) 이른바 實踐志向的 論理로서의 統一論議가 점점 논리적인 체계성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지만 그것의 認識的 한계나 기여적 可能性에 대한 보다 더 客觀的인 作業이 학계 뿐만 아니라 특히 權力을 장악하고 있는 支配勢力에 의하여 전적으로 무시되어 왔다는 사실은 現實的으로 權力構造의 특징을 보여주는 인기위주의 無責任性을 의미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急進勢力의 의식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다음 것을 참고할 것. 青年歷史硏究會, 「正義의 戰爭」, 새세대, 1987.

략의 하나로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이들 執權勢力은 국내정치에서 급진세력이 몰고 오는 공격의 예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대응의 일면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격으로까지 나아가기도 한다.[4]

사회의 또 다른 지배세력 중 정치적 집권을 경쟁하는 정치지도자들에게서도 성급한 분단극복의 주장과 "이데올로기의 終焉"이라는 허상에 뛰어들고 있는 경우를 쉽사리 목도할 수도 있다. 이들은 마치 이 문제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치인으로서의 인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처럼 여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한반도에서 分斷克服과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적실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고, 마치 그러한 시기에 놓여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러한 인식은 당장에라도 실현될수 있는 것처럼 착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의 실정이다. 이처럼 幻想과 當爲的 論理와 정치적인 의도가 짙게 깔려 있는 한반도의 분단극복에 관한 논의들을 고려할 때 그러한 논리들은 또 다른 환멸과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전초적인 逆斷으로 이해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다.

한반도에서 분단을 극복하고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몇 가지 全段階的 作業이 요청되고 있는데, 그러한 작업의 전제 위에서만 비로소 구체적인 통합의 모색이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기서는 먼저 한반도의 분단과 이데올로기의 갈등에 대한 문제를 그 深化過程의 측면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

4) 이러한 性格을 보여주는 代表的인 경우가 바로 北方政策으로 표현되고 있는, 共產主義國家와의 交涉志向性이다. 이러한 교섭은 여러 면에서 그 의미가 評價될 수 있지만 그러한 교섭이 이데올로기적인 연성화나 탈이데올로기와는 관계없이 자기 이데올로기의 强化를 위한 우회적 性格을 가지고 있음을 간과하는 일면도 보여 주고 있다.

Ⅱ. 이데올로기의 葛藤과 韓半島의 分斷

한반도의 분단은 强大國의 利益 競爭이 빚어놓은 역사적인 결과로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韓國民의 意志와는 무관한 외적인 강제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분단의 강제성이 韓國民族의 내면적인 현실로 변모되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내포되어 있다. 외적인 강제로부터 마침내 내적인 자기화의 현실적인 것으로 변모되어버린 이러한 일련의 과정 자체가 곧 韓國民族의 한계인 동시에 民族的인 悲劇이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 궤적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게 된다.

1. 分斷 論議의 地政學的 認識

한반도의 분단 논의는 역사적으로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이유에서도 인식될 수 있다. 흔히 이러한 地政學的 논의에는 이미 민족의 내재적 문제를 외연화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분단 자체가 한국의 국제사적 지역성에서 빚어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인식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韓半島는 아시아 대륙의 동단에 놓여 있기 때문에 대륙으로의 진출이나 海洋으로의 關門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의 접점지역으로서의 위치를 부여받지 않을 수 없었다. 대륙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강대국은 그들의 영향력을 해양으로까지 확대하려 하는데, 이때 한반도는 그 경유지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반면에, 해양세력이 강성해져서 그들의 영향력을 대륙으로 진출시키려 하면, 한반도는 진출의 교량역할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 한반도가 역사적으로 大陸勢力과 海洋勢力 사이에서 拮抗의 굴절된 역사를 보여주었던 것은 이러한 사정 때문이었다. 특히 양대세력을 누를 수 있을 정도로 국가 발전을 이룩하지 못

했을 때에는 그러한 사정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5]

특히 이러한 성격은 만일 大陸에서 새로이 권력의 交替가 나타나고 그 교체에 따른 세력 범위의 획정이 행해지게 되면 韓半島는 예외 없이 대륙 세력의 侵奪을 받게 되는 역사적 경험으로 보여주었다. 그 반면에 海洋勢力이 통일을 이루거나 주도세력간의 교체가 있게 되면, 그 영향력을 대륙으로 외연하려 하게되고, 여기에 필연적으로 한반도가 그 일차적인 영향권에 강제로 편입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

대륙세와 해양세 사이의 이러한 대립의 일차적인 影響力의 수용자로 한반도가 위치지워질 수 밖에 없었음은 韓半島 자체의 내적인 한계에서 빚어진 결과인 점도 없지 않다. 오히려 統合된 국력의 신장을 통하여 해양세력과 大陸勢力을 적절히 견제하면서 이를 통하여 대외적인 진출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지만 이러한 시도는 歷史的으로 극히 예외적일 정도로 제한되었다. 地政學的 한계를 극복하여 오히려 국력의 발전과 외적인 팽창으로 나아갔던 경우를 다른 나라의 역사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경우는 지정학적 요인을 그대로 수용했던 한계적 역사의 한 성격으로 머물러 있었던셈이다.

韓半島에서 빚어졌던 대륙세와 해양 세력 간의 관계를 역사적인 차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大陸勢와 韓半島사이의 初期的 葛藤期……약 7세기경까지는 韓半島의 세력과 중국대륙세력 사이에 각기 영향력을 파급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대립관계를 보여주었으나 점차 중국대륙세력의 직간접 영향력이 한반도에 미치게 되었다.

2. 大陸勢의 影響力 行使期間……약 18세기까지 중국의 大陸勢는 그들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였고 이것에 대항하여 한반도에서의 세력이

5) 이러한 지정학적 인식은 전후의 정치학에서는 일종의 국가유기체론적 발상이라는 견지에서 비판되어 왔지만 현실적으로는 의미있는 인식논리이기도 하다. John Agnew, *Place and Politics: The Geographical Mediation of State and Society*, Boston: Allen and Unwin, 1987, pp. 80~83.

도전을 감행하였었다. 이 기간동안 한반도에서는 때로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대륙세력에 대한 종속적 위치를 받아들였지만 대부분의 시기는 실질적으로는 主權國家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3. 大陸勢의 變化와 그 影響力 派及期……19세기 초기부터 대륙세 내의 새로운 변모가 나타났다. 러시아가 아시아에서 대륙세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는 자연히 그때까지 중심적인 大陸勢였던 중국과의 세력交替期的 갈등을 빚게 되었다. 이러한 성격은 자연히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곧 그 뒤를 이어서 전개되었던 海洋勢力의 진출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4. 大陸勢와 海洋勢의 1차 葛藤……해양세력으로서 위치를 차지했던 日本은 그 진출의 방향을 대륙으로 지향하였고 따라서 교두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반도는 양대세력간의 갈등의 초점이 될 수 밖에 없었다. 露日戰爭과 淸日戰爭은 곧 이러한 양대세력 사이의 이익갈등의 표출이었으며 이 전쟁의 귀결자체는 한반도의 위치를 어느 한 세력의 점유물로 귀착시키게 되었다. 두번에 걸친 전쟁에서 戰勝하게 된 日本이 한반도에 대한 배타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음은 해양세의 대륙세에 대한 압도를 의미하였다.

5. 海洋勢力의 再編과 大陸勢와의 對決……2차대전의 종결은 대륙세에서는 러시아 중국의 연대를 가져왔고 해양세력은 美國이 일본을 교체하게 되었다. 새로이 일본을 대신한 미국이 대륙으로의 진출을 모색하였고 그러한 模索은 새로이 대륙의 패권을 장악한 러시아와의 갈등을 빚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일방적인 어느 세력의 우위결정으로는 행해지지 않았고, 그러한 성격은 자연히 한반도의 分斷으로의 잠정적 균형상태로 귀착되었다. 즉 한반도의 분단은 재편된 대륙세와 해양세의 잠정적인 균형의 모색이 빚어놓은 强大國的 結果였다.

6. 單一的 影響力 行事를 위한 試圖……한반도에서 大陸勢와 海洋勢 사이의 갈등은 不安定한 勢力均衡으로 지속되었다. 이러한 성격에서 벗어나서 어느 일방의 優越한 安定勢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곧 1950년의 韓國戰

爭이었다. 이 전쟁은 최초 대륙세의 잘못된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히 대륙세의 패권을 잡은 러시아나 대륙의 共產政權을 수립했던 中共에서는 韓國戰爭이 비록 잘못된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러시아와 중공의 국내적인 정치적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처이기도 했다. 즉 러시아의 경우에서는 韓國戰爭은 대륙에서 새로이 등장하기 시작한 중공의 상대적인 약화와 對蘇依存의 성격을 지속시킬 수 있게 하는 방편이 되었다. 또한 소련은 北韓을 절대적인 종속체제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요구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소련의 利益圈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 계기가 될 수 있었다.

한편 中共의 경우는 1949년에 이른바 대륙에 共產主義 政權을 수립하였지만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그 당장에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國共鬪爭의 열기를 외부에 유출하고 한국전쟁을 資本主義的 帝國主義者의 국제적 음모로 규정함으로서 대내적인 정치통합을 이룩하는데 이용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은 새로이 대두한 海洋勢力으로서 미국의 경우에서도 물러서기 어려운 선택으로 강요받게 되었다. 만일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교두보를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대륙으로 진출을 시도할 수 있는 발판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極東에서 새로이 영향력을 확보한 일본에 대한 위기를 맡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미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한국전 개입을 가져오게된 배경이 되었다.

7. 葛藤的 共存의 時期……1953년에 체결된 한국전쟁의 休戰은 결국 大陸勢와 해양세가 한반도에서 일방적 지배권을 확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뒤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이질적 分斷體制는 양대세력 사이의 후원과 지원을 받으면서 갈등적 공존이라는 특이한 현상으로 이어져 갔다. 이러한 성격은 국제법적으로는 전쟁상태에 있으면서도 非戰鬪的인 상황으로 지속되는, 그리고 兩對勢力의 영향권 하에 있으면서도 각기 獨自性을 그 體制가 주장하는 자기 모순적 성격의 굴절로 표

출되었다.

이처럼 한반도는 地政學的으로 자기자신의 열악한 국력의 소산을 보여줄 때 대륙세와 해양세라는 두 개의 대립적 갈등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받게되었고 그 결과는 현실적으로 한반도 분단의 현실성을 부여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외적 영향력을 이제는 완전히 자기 것으로 內在化하여 양대세력의 첨병적 위치를 고집하는 특이한 결과까지 보여주게 되었다.

2. 이데올로기의 內面化 過程

한반도의 분단은 구체적으로 2차대전이후 이데올로기의 영향에서 빚어졌던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분단은 戰後 體制的 狀況에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훨씬 이전부터 이데올로기적 갈등현상이 韓半島에서 나타나고 있었다.[6] 오히려 어느 의미에서는 한반도가 분단되기 이전부터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민족의 분열이 선행되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양대세력의 갈등을 수용하는 측면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韓國 社會에서 근대적인 의미에서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이 시작되었던 것은 시기적으로는 대체로 1920년대부터였다.[7] 이 시기는 아시아에서는 일종의 격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17년의 러시아 革命의 발발과 그 성공은 아시아인에게는 실로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 뿐 아니라 1918년의 2차대전의 종결과 베르사유 체제의 성립도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前者의 경우는 주로 進步的인 知識人들 사이에 社會主義 이데올로기가 민족 해방의 이념적이고 실천적인 가능성으로 이해되어졌으며, 後者의 경우는 주로 傳統的 保守 支配勢力들 사이에 브르즈와 민주주의가

6) 최근 韓半島 분단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책임의 外的 論理와 內的 論理로 兩分되고 있으나 이러한 구분은 無意味한 것으로서, 이를 區分하여 外的 責任論으로 논리화하려는 것은 일종의 政治的 의도성이 없지 않으며, 反外勢意識의 고양을 전제로 한 論理의 개진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7) 이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된 見解를 보여주고 있다. 김준엽·김창순 共著, 「韓國共產主義運動史」, 제 1권 참조.

새로운 희망으로 받아들여졌다. 社會主義는 당시 進步的 知識人에 의하여 식민지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反植民·反封建으로 규정할 수 있는 이념적 기반을 제공해 주었으며, 이는 民族運動의 戰略을 反帝運動과 反資本主義運動으로 일치화 시켰다.[8]

한편, 地主 등 傳統的 支配勢力의 경우는 植民地體制에서 그들의 사회적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족해방을 추구할 수 있는 이념으로서 윌슨의 민족자결론을 중요한 理念的 價値로 수용하였다.

이러한 두 갈래의 인식이 묘하게 결합된 것이 바로 3·1운동이었다. 3·1운동은 보수우파에게는 戰後 베르사이유 체제가 선언했던 民族自決主義의 한국에의 적용을 희망하게 되었고, 진보적인 지식인과 청년층에게 있어서는 러시아의 10월 혁명의 東方政策에 구체적으로 코민테른에 대한 기대감과 그것에 의한 사회혁명의 전개양식을 모방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民族解放이라는 동질적인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협동적인 행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이 당시 3·1운동의 지도권은 장로층이 그리고 실재적인 參與와 組織 등 행동대의 역할은 청년층이 맡았던 것도 이러한 성격을 가름하게 해준다.[9]

3·1 운동은 전민족적 반일 저항운동으로서 각성된 民族意識의 표현이었다. 이 운동에 의하여, 韓國民族은 獨立國家로 지속되어 왔던 역사의 단절이 强壓的인 일제의 침탈에 기인된 것이었음을 분명히 표명할 수 있게 되었다. 3·1운동에서 민족적 희생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폭압은 독립운동을 좌절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長老層과 靑年層 사이에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었다. 즉 長老層은 비록 이 운동이 그 당장에는 성과를 얻지

8) 이러한 현상은 식민지 민족주의의 보편적인 것이다. Michael Palumbo, *Nationalism*, N.Y.: Greenwood, 1981, pp. 32~33, 陳德奎, 現代民族主義의 理論構造, 지식산업사. 1983, pp. 305~308.

9) 愼鏞廈, 「韓國民族獨立運動史 硏究」, 을유문화사, 1985, p. 289 이하 참조.

못했지만 민족의 단합된 저력을 국제 사회에 발휘하였고 나아가서 민족의식을 고양시켰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 반면에 진보적 지식인이나 청년층의 경우는, 지도세력의 한계와 지도 이념의 결여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의 부족 때문에 실패한 운동이라고 평가하였다.

서로 다른 해석상의 차이는 그 뒤 民族運動의 전개에도 그대로 들어났다. 즉 보수우파에서는 더 이상 반일민족운동에서 무력적인 저항은 非效果的이기 때문에 民衆動員的 運動은 무의미하다는 주장까지 내세웠고 그 대신 독립운동에 대한 타협주의적이고 단계적인 주장을 내세우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民族改造論이라든가 自治政府論 등의 등장이 이를 설명해 준다.[10]

구체적으로 3·1 운동 이후 보수우파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3 갈래의 성격으로 분화되었다. ① 抗日武力闘爭論者 ② 自治論과 段階的 獨立追求論 ③ 그리고 文化的 民衆啓夢論이 그것이다. 이중에서 항일무력투쟁론이 주로 만주나 중국에서의 독립운동가에 의해서 추구되어졌다면 자치론과 계몽론은 국내의 우파가 보여주었던 성격으로서 이는 자연히 일부의 친일세력의 온존과 소극적 반일투쟁이라는 양면으로 지향될 수 밖에 없었다.

진보적인 청년 세력의 경우는 민족운동이 더 이상 保守右派가 지향하고 있는 온건 타협적인 방법으로는 성취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자연히 그것에 대치될 수 있는 이론으로서 社會主義的 지향성을 보여주게 되었다. 사회주의적 경향을 가졌던 청년 세력들은 당시 러시아의 東方政策의 영향, 구체적으로는 코민테른의 지령하에서 1925 년에 朝鮮共產黨을 창당하게 되었다. 물론 좌파의 경우도 그 성격적인 면에서는 몇갈래의 구분이 가능해지는데, ① 코민테른 추종자 ② 無政府主義者 ③ 민족·사회주의자의 구분이 그것이다. 물론 이들 중에서 좌파의 중심적인 역할은 코민테른 추종자였다. 코민테른 추종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조선공산당

10) 陳德奎, "分斷社會의 民族主義論", 李相禹等著, 「分斷과 統一 그리고 民族主義」, 博英社, 1984, pp. 107~114.

의 창당은 民族運動에서의 좌·우의 이념적 갈등을 보여 주게 되는, 본격적인 출발이었다.[11] 사회주의의 주도세력은 共產黨의 創黨過程에서부터 그 이후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지시, 정확이 말하자면 코민테른의 지령하에 있었던 國際共產主義의 운동의 하부조직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민족운동의 이념적 측면에서까지도 코민테른의 민족테제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민족적 특수성이 외면되었다.

국내에서 보수 우파적의 소극적이고 단계론적 민족해방의 전략과 진보적 사회주의적 세력의 반제·반봉건의 社會 革命的 추구는 서로 간에 깊은 괴리를 낳게 되었다. 보수우파에 있어서 좌파의 인식과 주장은 그들의 傳統的인 지배권에 대한 도전일 수밖에 없었으며 그 반면에 좌파의 경우는 보수 우파야 말로 제국주의 세력과 야합된 전통적 지배세력으로서 일차적인 반민족 세력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공산당의 창당 이후 좌파 투쟁의 구체적인 전략은 民族革命과 階級革命을 일치화하는 것이 었으며 국내에서의 계급투쟁의 구체적인 대상을 地主와 自本家에 대한 노동쟁의와 소작운동으로 표출 설정됨으로서 보수우파와 좌파 사이의 갈등은 사실상 투쟁적인 성격으로 변모하였다.

일본 식민지 통치의 양식이 이른바 文化統治의 단계를 거쳐서 戰時動員體制로서의 군국주의적인 성격을 보여줌에 따라 식민지 통치자의 폭압적 약탈은 가열될 수 밖에 없었다. 식민지 통치세력은 민족운동에 대해서 우파의 경우는 적극적인 회유와 포섭을 강구하여, 이전의 전통적 지배세력으로서의 지주와 자본가에 대해서는 식민지적 연대성으로 귀속시키게 했으며 좌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탄압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식민지 통치자의 억압양식은 민족운동에서 좌·우 양대 세력간의 대립을 심화시킴으로서 서로간에 사실상 적대관계에 돌입하게 되었다. 특히 우파에 대한 대립적인 대결을 추구했던 좌파는, 그 일부가 총독통치의 억압때문에 이미 1930년의 新幹會 해체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의 갈등을 심화시켜 대결적

11) 서대숙, 「韓國共產主義運動史硏究」, 화다, 1985, pp. 66~94.

인 단계로 구체화 되었다.[12] 遊休主義者의 위치에 떨어져 있었고, 左翼運動은 日帝末期에는 극히 부분적으로 左派一部는 총독통치의 억압에 의하여 지하로 잠입되었다. 이러한 狀態가 1945년의 解放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持續되었다.

그러므로 韓半島에서 이데올로기적 葛藤은 이미 좌·우파의 政治的 세력들 사이에 서로의 깊은 不信과 對立으로 인하여 통합의 가능성은 사실상 期待될 수 없었던 狀況으로 전개되었다.

3. 帝國主義의 分斷政策

물론 어느 사회에서나 指導勢力들 사이에 이데올로기적 대립이나 갈등은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一般的으로 비서구사회의 경우 대체로 외부의 强大國家의 影響力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특징을 보여주게 된다. 이러한 一般論的 상황은 1945년의 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 이미 內面的으로 심각한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함유하고 있었던 한국 사회에서 미·소 强大國의 영향력은 곧장 韓半島의 分斷이라는 具體的인 事實로 展開되었다.[13]

韓半島 分斷의 구체적인 展開와 성격, 그리고 그 責任問題에 대한 여러 가지 論議가 提起되어 왔지만 여기서는 보다 客觀的인 인식이 必要하다는 事實만을 指摘해 두기로 한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분단이 內的인 책임에서 일단은 연유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國際的인 논의는 이미 1940年代初 强大國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있었다. 얄타회담, 카이로회담, 포츠담 회담 등 일련의 國際的 會合에서 한반도의 問題는 강대국 사이의 關心事였다. 즉 한반도의 문제는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영향력 획정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회합에서는 어떤 具體的인 論議를 개진하기 보다는 이른바 外交的 수사학의 表現으로 시종되었으

12) 같은 책, p. 124.
13) 김국태, 解放 3年과 美國, 美國의 對韓政策 1945~1948. 돌베개, 1984. 참조.

며 서로가 다른 이해의 관점에 의하여 상대방을 평가하고 있었다.

美國이 한반도의 問題를 政策的인 次元에서 본격적으로 考察했던 것이 이른바 美國務省이 중심이된 三省委員會에서 였다. 여기에서 한반도의 分割이 구체적으로 計劃檢討되었다. 일반적으로 論議되고 있는 것처럼 3성 위원회에 의한 38道線 분할 계획안은 單純히 일본군의 무장을 解除하기 위한 軍事的인 조처라기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그대로 남게 된다. 가령 군사적인 차원에서 일본군의 무장해제가 중심이었다면 38도선의 분할안은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14] 그 뒤 美國의 대한 政策은 사실상 그러한 것과는 差異를 보여 주었는데 예를 들면 南韓에서 美軍政은 일시적인 잠정적 行政權의 수행이라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미국적 影響力속으로 남한을 編入시키기 위한 일련의 措置로 강구되었다. 親美的인 保守政權을 수립함으로서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행사를 위한 전진기지를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남한의 미군정에서의 國防警備隊의 設置라던가 또는 學制를 미국식 편제로 변화시킨 것등은 南韓에서 미국의 실제적인 제도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8道線을 분할했던 一次的인 責任이 미국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일련의 過程이 전적으로 미국만의 責任으로 歸着될수는 없는 일이다. 미국의 對韓 政策 自體가 소련의 太平洋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것에서 연유되었다는 점에서나 그리고 소련 역시 한반도를 그들의 영향권에 두려했다는 점 등은 소련이 占領한 북한에 이른바 사회주의 체제적 人民委員會를 組織하였으며 친소적인 左翼 인사나 또는 蘇聯系 韓人을 인민위원회 체제의 核心的인 위치에 앉게 했다는 事實 등은 소련의 이러한 意圖를 짐작하게 해 준다.[15]

미국과 소련은 결국 이전의 帝國主義的인 수법으로 領土擴張과 유사한

14) 이 문제는 다음책을 참고할 것. 「金學俊, 韓國問題와 國際政治」, 博英社, 1987, pp. 3~7.

15) 이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는 다음 책을 참조할 것.
閔寬治, 具天書 譯, 「韓半島문제의 새로운 인식」, 온누리, 1987, pp. 61~64.

衛星國家의 樹立을 競爭的으로 展開하였다. 이들 사이의 政策的인 전개에서는 몇가지의 차이점을 보여 주고 있다. 蘇聯의 경우에는 소련군의 北韓進駐 이전에 이미 이 地域에 대한 정확한 情報와 知識을 가지고 있었다. 그 뿐아니라 소련은 북한의 實質的인 統治와 行政을 擔當할 수 있는 親蘇的 政治人을 確保하고 있었다. 소련군의 북한 진주는 그곳의 住民들에게 感情的으로는 解放軍으로서의 位置를 얻고 있었다. 북한에서나 남한에서 가장 時急하게 變革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欲求는 무엇보다 먼저 親日派의 肅淸에 대한 것이었으며 농민들의 土地所有의 熱望이라는 사실을 소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처를 積極的으로 推進하였다. 물론 이러한 조처는 强壓的으로 그리고 非合理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수의 住民들은 남한으로 越南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南韓에서의 미군은 처음부터 마치 軍事作戰에서 敵地를 장악한 占領軍과도 같았다.[16]

이러한 사정은 남한에 최초로 진주했던 美 24사단장의 布告文이나 또는 맥아더 사령부의 포고문에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의 내용은 軍事作戰의 一環으로 한국에 미군이 진주하였으며, 그리고 한국인에 대해서도 점령지 주민을 대하는 태도로 군림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17] 미국의 對韓政策自體가 남한에 樹立하게 될 親美主義的 政權樹立을 確保하기 위하여 전통적 보수세력을 권력자의 위치로 등장시켰다. 구체적으로 이들 보수세력의 대다수는 실제로 植民地 시대에 消極的인 反日抵抗을 보여주었거나 또는 일부인사의 경우 親日的인 태도까지 보여 주었지만 親美主義者라면 미 군정은 官職에까지 등용하였다. 일반 국민들로부터 친일파라는 지탄을 받았던 인사들까지도 미국에 거주하였거나 美國에 留學했다면 그대로 관직에 任用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일본의 植民地 總督府의 官吏까지도 그대로 殘留시킴으로서 大部分의 한국인에게는 美軍政과 日本의 總督體制

16) "民主主義 民族戰線" 편, 「해방 조선」 1. 과학과 사상사, 제 1 장 참조.
17) 宋南憲, 「解放三年史」, 까치, 1985, pp. 569~570.

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들었다.

미국과 소련은 韓半島에서 單一정부의 수립을 摸索한다는 명분으로 信託統治案을 제기하였으며 美蘇共同委員會도 開催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분단의 責任을 서로 回避하기 위한 명분찾기의 수단에 불과했다. 실제로는 미·소가 한반도의 分斷을 전제로 하면서 각기 점령지역에서 影響力의 공고화를 確保하기 위한 衛星國家의 수립에 광분하였다.

이러한 過程에서 優先的으로 추구되었던 것이 남·북한 양지역에서 純粹한 성격의 民族主義勢力을 제거하는 일이었다. 北韓에서는 소련군의 진주와 함께 각급 人民委員會의 創設過程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曺萬植등 민족주의자들을 强壓的으로 제거하였다. 南韓의 경우에도 이러한 事情은 비슷하였다. 미군은 上海臨時政府의 法統性을 부인하였고 呂運亨 등 중도적 民族主義 인사들을 정부수립과정에서 제외하였다. 민족주의적 人士들이 南韓과 北韓에서 제외된 채 親蘇共產主義者에 의한 북한 정권의 수립과 親美保守主義者에 의한 남한의 정부수립은 실제로 한반도의 分斷을 民族內的인 것으로 기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18]

4. 分斷의 固着化와 민족 분열의 深化

한반도에서 서로 異質的인 權力構造의 형성은 일종의 移入國家와 같은 性格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경우는 모스크바로부터 유입되어 온 列車輸送政權이라고 할 수 있다. 北韓의 權力占有者들은 대부분 소련에 거주하고 있었던 韓人들로서, 이들은 철저할 정도로 소련점령군의 하수인들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소련의 指令에 따라 북한을 소련식의 공산주의적 集團社會로 變貌시키는 일에 진력하였고, 심지어 소련의 指示와 支援에 의하여 전쟁까지도 감행하게 되는 反民族的 속성까지도 자행하였다.

18) 북한정권의 수립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고할 것,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北韓體制硏究」, 고려원, 1987.

북한의 이러한 性格에 마치 競爭이나 하듯이 남한의 경우에도 政府樹立은 미국으로부터 함대 수송된 정권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民族陣營의 인사들의 脫落은 불가피하였다. 兩體制의 이러한 성격은 각기 國民의 민족적 熱望과는 무관하게 宗主國의 의지의 수용에 치중하게 되었다. 1948년 이후의 南北 양체제의 葛藤的 심화과정을 段階的으로 規定하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해진다.

1. 異質體制의 樹立期間……이 기간은 대체로 1945년에서 1950년의 韓國戰爭이 발생했던 시기까지이다. 각 體制는 우선 國家樹立의 명분을 追求하였으며 그러한 명분의 優先的인 論理로서는 이른바 각기 그들 政府만이 한반도의 유일 合法政府임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主張은 자연히 상대방의 非合法性을 攻擊하는데 치중하게 되었다. 북한의 경우는 그들의 政府가 抗日獨立運動의 核心勢力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반 국민의 개혁적 열망을 受容한 적법적인 절차에 의해 수립된 정부라고 强辯하였다. 또한 南韓의 경우에도 그들 정부의 合法性을 純粹한 민족적인 세력에 의한 國家建設이라는 주장으로 정당화하면서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 合法的임을 國際聯合에 의한 독립의 承認에서 설명하기까지 하였으며, 국민의 총의에 의하여 選擧로 구성된 制憲議會에서 제정된 憲法에 따라 국가가 이루어졌다고 내세웠다. 또한 이 時期에서는 서로가 격심한 敵對感을 노출하였기 때문에 국제정치면에서는 冷戰體制의 최극단적인 양상을 보여 주고 있었다.[19]

2. 分斷體制의 空間 領域 構築……이질적인 체제의 구축은 곧이어 힘의 論理에 의하여 상대방을 攻略하려는 同族間의 戰爭으로 나타났다. 北韓의 南侵은 어떠한 의미에서도 合理化될 수 없는 反民族的인 것이며 또한 국제적인 冷戰體制의 영향하에 이루어진, 보다 正確히 말한다면 소련의 하수인적인 역할의 수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 冷戰體制下에서 이데올로기적 대리 전쟁의 성격을 가졌던 北韓의 南侵은 國際戰爭의 國內化라는 가

19) 김명오, 「民族分斷과 統一問題」, 한울, 1985, pp. 188~204.

장 反民族的 狀況으로 나타났다. 休戰의 形態로 終戰되었지만 사실상 兩體制는 각기 國內的으로는 여전히 전쟁 상태임을 내세워 政治的인 統治의 명분으로 活用하게 되었다. 1953년을 경과하고 부터 약 10여 년간 兩體制는 각기 獨者的인 領域을 構築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優越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努力을 경주하게 되었다.

3. 體制 競爭의 突入……1960년대부터 兩體制는 서로의 體制的 우월성을 確保하기 위하여 주로 經濟發展과 軍事的인 優越性을 확립하는 일에 치중하였다. 이러한 競爭關係의 돌입은 주로 經濟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체제의 우월성의 立證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의 後援勢力은 이면에서 이들 國家를 支援하게 되었다. 먼저 북한의 경우는 一種의 集產主義的인 國家社會主義를 근간으로 해서 이른바 自力更生의 經濟發展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南韓의 경우에는 이른바 近代化理論을 바탕으로 하며 外國의 자본주의와의 연계속에서 經濟發展을 모색하였다. 市場制度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國家의 强力한 經濟成長政策을 위주로하는 일종의 國家資本主義的 方法을 동원하여 급속한 經濟的 物量生產에 치중하였다.[20]

4. 體制 內的 再强化의 試圖……1970년대 중반기부터 兩體制는 서로 國內的인 政治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가령 北韓의 경우에는 金日成의 父子 世襲體制의 승계와 그것의 國際的인 인정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南韓의 경우에도 朴正熙의 獨裁에 대한 국내외적인 認定이 要請되었다. 南北韓의 이러한 체제내적 문제는 자연히 각기 내적 整備의 必要性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것의 변형으로 전개된 것이 이른바 7.4 共同聲明이었다. 이것은 사실상 각기 社會內的 必要性에 起因된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 부터 民族의 再結合의 문제 解決은 기대될 수 없었다. 北韓에서는 金日成·金正一 父子 世襲體制를 確立하기 위한 社會的 硬直化를 지속적으로 유지

20) Bruce Cumings, *The Two Koreas*, The Foreign Policy Association, 1983에서 p. 39 이하에서 남·북한의 이질화를 설명하고 있다.

하면서 南朝鮮 解放의 실천적인 가능성이라는 의미에서 남북대화로 나아갔다. 또한 南韓에서는 朴正熙獨裁의 組織化를 위한 이른바 維新體制의 구축을 위해서 이를 대외적으로 의연화하기 위한 方法으로 남·북의 대화에 임하였다.

5. 統一의 主導權 掌握을 위한 競爭의 突入……1980년대 중반부터 南北韓 兩體制는 國際社會에서 서로가 한반도 統一의 주도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認識시키기 위하여 서로가 民族統合의 가장 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宣傳하였다. 그러한 선전의 具體的인 表現이 北韓에서는 高麗聯邦制를 내세웠으며, 남한에서는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제창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장들은 兩體制가 本質的으로 한반도를 統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現實的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상대방에게 기선을 제압하고 國際社會의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宣傳의 意味를 짙게 깔고 있었다.

Ⅲ. 韓半島에서의 이데올로기적 存在樣式

韓半島의 통합을 위한 南北韓 兩當事者間의 인식과 시각에는 상당한 거리를 보여주고 있다.[21] 이처럼 서로가 다른 主張을 내세우면서도 한결같이 統一의 當爲性을 주장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각각의 統一方法이 가장 적실성이 크다고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이러한 주장은 곧 각각의 體制强化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체제속으로 상대방의 체제를 병합 수용하려는 意圖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實質的인 統合方案은 各體制가 포용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民族社會가 指向할 수 있는 통합된 共同體로 결집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기서는 먼저 현재

21) 南北韓兩當事者의 시각과 함께 주변의 美·日·中·蘇와 연관된 상황의 변화를 조망할 必要도 제기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韓半島周邊政勢와 南北關係의 展望, 민중사, 1985. 참고할 것.

南北韓兩體制가 주장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의 具體的인 전개와 그 성격을 살펴보기로 하자.

1. 韓國에서의 이데올로기의 展開

韓國에서의 이데올로기의 전개는 처음부터 몇 가지의 特徵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民族主義的 理念에 대한 이탈적인 성격을 보여주었다. 傳統的인 民族主義 사상을 비과학적이라거나 또는 민족주의를 파시즘과 동일시하였던 美國 占領軍的 視角의 영향은 당시 남한의 指導者들에게도 그대로 수용되었다. 둘째로 이념의 가치적인 성격을 무시하였으며, 마치 이념은 미국식 사상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족하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념은 자연히 미국적인 것이면 모든것이 다 가치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이상한 상황까지 연출하였다. 세째로 이데올로기를 무시하면서도 民主主義를 만능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정치에서 선거만이 전부로 이해되었으며 부정선거조차도 정당화 되었고 그밖의 문제는 이른바 자유라는 이름하에 放縱·放任이 난무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보여주었다. 다시 말하면 남한에서는 이데올로기적 空白狀態에 있었으며 이러한 현실은 단지 집권자의 權力維持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그것을 수용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성격은 곧 民族主義에서의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었던 지배세력자신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결과이기도 했다.[22]

1) 保守的인 國家主義體制 確立

남한에서 국가를 수립하였던 李 承晩의 保守 執權勢力은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먼저 社會主義의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와 國家樹立過程에서 이탈되었거나 제거되었던 민족주의 세력과 그들이 점유하고 있었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奪還하는가의 문제점이었다. 남한에서의 政權樹立過程에서는 철

22) 이러한 현상은 이데올로기를 경시한 미국정치의 성격적 영향도 있었다. 陳德奎, 「現代政治社會學理論」, 三英社, 1988, pp. 33~38.

저하게 친일파가 제거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친일적인 일부인사에 의한 정치적 요직의 점유까지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그만큼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민족주의와의 거리관계를 조성시키게 되었다.

남한에서 政治權力을 장악하였던 親美 保守勢力은 이데올로기면에서는 주로 두 가지의 내용을 강조하였다. 그중 하나는 民族主義에의 受容을 통하여 정권의 장악을 합리화하려는 시도였다. 또 다른 하나는 美國式 民主主義를 내세워 정치적인 한계점을 극복하려는 의도를 보여 주었다.

民族主義에 대한 受容의 시도는 구체적으로 安浩相에 의하여 주장되었던 一民主義가 그것이다.[23] 일민주의는 이른바 民族至上, 國家至上을 내세웠다. 이것은 식민지 민족주의가 일반적으로 지향하는 反帝 反封建的인 성격과는 판이한 것으로서 國家有機體說的인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있는 國家社會主義的인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民族至上, 國家至上은 일반 국민들로부터 기존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려는 이념으로서, 이는 곧 李承晩의 權力掌握을 합리화하고 그것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추구하였다. 一民主義는 자연히 反共이데올로기와 합치되었으며 建國初期에 국민들의 이데올로기적인 空白狀態를 충전시켜 주었다. 물론 一民主義도 그 당시 권력의 중요한 세력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韓民黨과는 경쟁관계에 있었던 族靑派의 기본적인 이념이었기 때문에 李範奭의 제거를 계기로 하여 자연히 정치의 전면으로부터 소진되고 말았다.[24]

그러나 美國式 民主主義는 李承晩의 집권과정에서 일관적으로 주장되었던 이데올로기였다. 마치 민주주의는 時代的인 理念이며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실시하는 것이 남한 집권자의 책임이라고 주장될 정도였으며 특히 이승만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수용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로 자처하였다. 민주주의의 理念的 本源地가 美國인것처럼 인식되었던

23) 一民主義는 安浩相만이 아니라 梁又正도 주장하였다. 安浩相, 「民主的 民族論」, 語文閣, 1961 參照.

24) 李廷植, 「韓國政治狀況의 諸斷面」, 고려원, 1983, pp. 236~243.

그 당시의 韓國에서 李承晩은 미국의 民主主義를 올바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로 선전되었다. 이승만 스스로도 민주주의의 유일한 敎師로 자처하였으며 이전의 王朝的인 體制에서의 絶對君主와도 같은 지배자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결과 정부는 자연히 이전의 전통적인 지배세력의 이익을 온존시키고 국가 권위의 확립을 강압에 의하여 통치권을 확보하려는 성격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국가는 마치 이전의 王朝體制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었으며 심지어 植民地 時代의 總督統治와 유사한 일면도 없지 않았다. 특히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한 통치구조는 국가의 權威를 강제적으로 확립하게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바로 國家主義의 성격이 첨예화했던 기간이라 할 수 있다.

2) 市民民主主義로의 回歸

이 승만의 執權過程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權威主義的인 統治體制로 일관하였다. 그 결과 이 승만의 집권과정에 실제로 참여했다가 권력의 核心部에는 충원되지 못했던 인사와, 지식인 그리고 극히 한정된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中產層等은 자연히 이 승만의 권위주의적 집권에 대한 抵抗的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고 이들이 이러한 저항에서 내세웠던 주장은 본질적인 민주주의로의 회귀였다.

이 당시 이들 抵抗勢力이 내세웠던 민주주의는 여전히 브르즈와 支配體制를 전제로 하는 市民民主主義였다.[25] 브르즈와 민주주의 주창자들이었던 이들과 이 승만 세력과의 투쟁은 4월 혁명으로 표출되었다. 4월 혁명의 결과로 집권한 장면 정권은 이전의 이 승만 세력과의 사회구조적인 단절같은 것은 없었지만, 다만 市民民主主義로의 회귀를 주장했던 또 다른 親美主義集團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이 승만 세력을 대치하여 支配權을 장악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거나 국가의 經綸能力같은 것은 결여하고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駐韓 美國大使館의 영향하에 들어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며, 경제적으로는 特定企業人에

25) 퀴넬, 서사면 역, 브르즈와 지배체제론, 학문과 사상사, 1987. 참고

의한 政經癒着現狀이 나타났으며 사회적으로는 일반국민에 의한 민주주의적 주장이 가져오는 無秩序의 極端的인 현상까지 보여주었다. 文化的으로는 張勉의 카톨릭적 편애에 의하여 종교적 갈등까지 구체화 되기 시작했고 종교와 정치의 연계성도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민민주주의의 이러한 혼돈은 특히 일단의 觀念的인 知識人과 일부 거짓 豫言者의 無責任한 주장에 의하여 상황을 더욱 더 악화시킨 측면도 있었다. 張勉의 市民民主主義의 주장은 韓國社會의 상황적인 조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미국적인 정치의 모방에만 치중하였으며 그 결과 시민민주주의는 또 다른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는 5·16 군사 쿠데타 조차도 막지못할 만큼 위약한 정권으로 전락되고 말았다.[26]

3) 祖國 近代化와 産業化

5·16 군사쿠데타에 의하여 집권하게된 軍部 統治勢力은 권력 장악의 자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관념적 합리화의 한 주장으로서 이른바 祖國近代化를 주장하였다. 조국근대화의 이념적인 내용은 다음의 몇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1950년대 말과 60년대 초기에 미국의 官邊學者들에 의하여 제3세계에 대한 미국의 대외 정책적인 성격으로서 주장되었던 近代化理論을 수용하였다.[27] 둘째는 日本의 近代化過程에 대한 模倣이었다. 즉 明治維新에 의하여 일본의 近代化를 이룩할 수 있었던 이른바 「위로부터의 혁명」이라는 정치사회적 변혁에 대한 방법을 채택하였다.[28] 그리고 세째로는 당시 일반 국민들이 보여주었던 경제적인 궁핍에서의 탈출과 경제발전에 대한 열망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성격적인 바탕 위에서 추진된 근대화의 이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격으로 나타났다. 정치적으로는 미국식의 부르즈와 民主主義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일종의 傳統的인 속성을 바탕으로하는 韓國的 民

26) 장면의 정치적 기반은 주로 서북지방의 기독교도, 특히 카톨릭이 지원세력이었고 또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

27) 이 분야의 대표적인 저서는 D.E. Apter, *Politics of Modernization*,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65. 이다.

主主義의 변용을 보여주었다. 韓國的 民主主義는 강력한 집행부적 권력을 집중시켜 政治的 浪費를 극소화 하고 국민적 합의를 전통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여 정립시키려는 것으로써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주장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는 궁극적으로 朴 正熙의 權力統治的 旣存體制를 지속화하기 위한 이념적 합리화의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權威主義的인 것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祖國近代化의 성격에서 두번째로 지적되어야 할 "위로부터의 혁명"은 韓國 近代化의 모형을 일본의 明治維新에서 받아들인 논리였다. 강력한 行政官僚와 企業家가 경제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깊은 연계를 맺은 체, 이를 軍部와 警察등 統制機官이 후원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러한 성격의 근대화는 일차적으로 국민의 의식을 근대적인 열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각종의 意識變革이 요청되었고 이를 위한 조직적인 動員活動까지 전개되었다. 구체적으로, 교육에서는 국민의식의 근대적인 양식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한국사회의 역사를 당위적인 가치로 미화 하였다. 國籍있는 敎育이라는 명분하에 전개되었던 이러한 교육적 변혁은 일반 국민들에게 변화에 대한 열망과 그것에 대한 자발적인 수용으로 나아가도록 촉발하였다. 일반적으로 "위로 부터의 혁명"이 그러하듯이 당시의 상황은 전국을 정치 사회적으로 統制된 組織社會의 성격을 강화함으로서 마침내 軍部統治로서의 權威主義社會를 확정하게 되었다.

조국 근대화에서 가장 큰 역점을 두면서 실시되었던 것은 經濟成長을 이룩하기 위한 産業化政策이었다. 産業化 政策은 당시 한국사회의 貧困追放의 일환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기대도 그만큼 높았다. 실제로 經濟發展을 이룩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지 못했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輸出主導, 低賃金의活用, 逆進産業化의 추진등의 정책적인 방안이 강구되었다. 經濟成長을 위한 産業化政策은 사실상 朴正熙 統治體制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던 관건이 되었

28) 트림버그, 김석근 역, 「위로부터의 혁명」, 학문과 사상사, 1987. 참고

다. 물론 이러한 산업화 정책은 경제적인 면만 아니라 경제외적인 면에서도 여러가지 한계를 가져다 주었다. 都·農 격차의 문제라던가 賃金構造의 不均等性이 가져다 주는 價値配分의 괴리문제 그리고 經濟成長爲主의 政策指向에 의하여 희생될 수 밖에 없었던 자유의 억압이라던가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拜金主義的인 物質萬能의 사고가 미만됨으로서 인간적인 가치의 상실을 가져다 주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하며, 이것은 마침내 그 뒤 한국사회에서 갈등과 위기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29]

남한 사회에서의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전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데올로기라고 말할 수 없는 정책적인 내용을 이데올로기로 선전되었을 뿐이다. 그 결과 한국사회가 전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이데올로기적인 내용으로서, 정치적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정착에 의하여 건전한 시민생활을 확립하는 일같은 것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또한 統一을 위한 民族主義의 理念的인 가치는 완전히 포기되다 싶이 했으며, 민족주의에 의한 이념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북한 金日成 主體思想에 의하여 수용되어 버리는 성격까지도 보여주게 되었다. 民主主義의 문제도 군부 파쇼적인 權威主義體制를 붕괴시키기 위한 투쟁적인 이념으로 전용됨으로서 마침내 이러한 성격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관념적인 의미로서의 民衆槪念이 설정되었다 다시 말하면 民衆槪念은 기존의 政治體制와 社會構造를 변혁시켜 民族主義와 民主主義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적인 의지의 집약이었다. 바로 이점에서 남한에서의 이데올로기는 지배자의 차원에서는 완전히 결여된 단지 정책이 그 역할을 대행하였다면, 피지배계급인 일반 민중의 경우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두가지 가치체계를 모두 수용하기 위한 민중 이데올로기적인 이념체계를 설정하게 되는 상황으로 전개 되었다.

29) 陳德奎, "韓國現代政治構造硏究序說", 한국사회변동연구, I, 民豪社, 1984 참고.

1. 北韓에서의 이데올로기적 變容

북한에서의 社會主義는, 正統的 이데올로기로서 그것의 理念的 주장을 통하여 權力의 지속적 유지와 社會的 統合을 강화시켜 주었다. 북한의 사회주의는 곧 북한의 政治體制의 存立의 正當性을 제시해 줌과 동시에 이것에 의하여 韓半島의 미래적 可能性까지도 모색하였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統一 問題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에서의 사회주의의 존재양식과 그것의 변용적 可能性을 고찰할 필요가 있게 된다.

북한에서의 社會主義는 대체로 3段階的 發展을 거쳐왔다. 그 첫단계는 사회주의적 소비에트 체제화의 시기였다. 두번째의 단계는 소비에트 체제의 變容이 이른바 金日成 主體思想으로 轉化되었던 단계이다. 그리고 現在는 사회주의적 變容으로서 主體思想의 制度的 공고화를 시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30]

초기 段階로서의 소비에트 體制化의 단계는 대체로 북한 정권이 성립된 후부터 이른바 주체 사상이 나타날 때까지로 이 시기는 北韓 政權의 權力確立의 시기이다.

북한에서의 초기 社會主義는 이미 식민지시대에 한국 사회에 受容되었던 사회주의와는 差異가 있었다. 한국사회에 수용되었던 사회주의는 대체로 그 性格이 1. 私的 所有制度의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中小規模의 개인소유에 대해서는 認定하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 2. 國家權力의 중앙집권적 성격보다는 各種의 勞動組合의 자율권을 상대적으로 인정하려는 일종의 分權的 行政制度의 形成을 모색하였다. 3. 토지에 대한 농민의 所有問題도 개인적인 耕作能力을 위주로 하여 토지의 직접적인 耕作經營權을 인정하였다. 4. 敎育에 대해서는 義務制를 근간으로 하였지만 能力을 基準으로 하여 일정한 敎育의 이수를 국가가 責任지게 하였다. 5. 社會保障이나

30) 金俊燁, 스칼라피노, 「北韓의 오늘과내일」, 法文社, pp. 45~63. 참고

福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歸着시켰다.

이러한 내용의 社會主義的인 성격은 사실상 근대적인 사회주의의 一般的인 성격을 그대로 採擇한 것임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곧 당시 朝鮮共產黨의 사회주의적 指向理念이기도 했다. 조선공산당의 이러한 理念은 북한의 공산주의자에 의하여 그대로 受容되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와는 다른 성격으로 변용되었다. 즉 북한의 사회주의는 朝鮮共產黨의 그 것과는 별다른 連關性은 가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련의 소비에트 체제를 그대로 모방하고 수용하였다.[31] 1. 구체적으로 소비에트 체제는 國家權力의 絕對的인 강화 現狀을 보여 주었다. 이는 곧 공산당의 일당 지배체제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모든 權力은 소비에트에로라는 소련 혁명 당시의 狀況을 그대로 模倣하였다. 2. 社會生活에서 集產體制를 강화하였다. 마치 革命직후 소련에서 행해졌던 集團 農場制度와 유사한 强壓的인 農民移住가 행해졌고 私的 所有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서 無所有의 平等化를 이룩하였다. 4. 敎育이나 그밖의 社會保障制度 등도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 復歸의 의미로서 행해지기 보다는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기여에 대한 補償의 意味로 행해졌다. 5. 全體主義 사회로서의 개인적 自律性이나 自發性은 극도로 制約되었으며 특히 "社會主義共和國의 붕괴를 획책하는 南朝鮮 傀儡와 美 帝國主義 勢力"의 침략을 봉쇄한다는 名目으로 전체 사회의 비밀경찰국가적 組織化로 나아갔다.

이처럼 北韓에서의 사회주의는 소련의 소비에트 체제를 그대로 收容하여 모방하였기 때문에, 부르조아나 封建 地主와의 階級的 革命鬪爭을 爭取하는 사회혁명의 과정을 經過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過程에서 이른바 反革命勢力으로 規定되었던 中產層이나 또는 知識人들이 肅淸될 수 밖에 없었음은 필연적이었다.

---

31) 북한사회의 구조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책의 논문들, 그 중에서 蔣尙煥, 高鉉旭, 金容基 등의 것을 참고할 것.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北韓社會의 構造와 變化」, 1987.

북한에서 소련의 支援에 의하여 權力을 장악할 수 있었던 金日成의 경우는 처음부터 그의 권력의 행사에 위협적인 세력이 적지 않았다. 그중에서 優先的으로 指摘할 수 있는 것이 북한 내의 민족주의적 知識人과 中產層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른바 國內派로 알려졌던 朝鮮共產黨의 朴憲永 系였다. 김일성에 의한 이들에 대한 제거는 주로 두 가지의 側面에서 전개되었다. 첫째는 理論的인 측면에서 그들은 無力化시켰다. 이 方法에서는 주로 南勞黨의 박헌영의 주장이 北韓社會나 또는 韓半島의 전반적인 狀況에 비추어 適實性이 없는 論理的 한계가 있다고 指摘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朴憲永의 당시 주장은 이른바 그의 8월 테제속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는 解放 이후 한반도의 當面의 政治的 課題는 부르조아 民主主義 사회의 실현으로 規定하였으며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朝鮮共產黨이 취해야 할 當面의 任務는 議會主義的 政治鬪爭을 주조로 하여 사회주의에 연관된 중간 세력과의 階級的 연대를 形成하는 것이었다.[32] 바로 이러한 주장 자체가 일종의 觀念的 論理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實際的인 戰略이나 鬪爭의 전개양식에서는 차이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실제적인 政治의 權力鬪爭에서는 金日成에 의하여 공격의 자료로 이용되었다. 김일성은 박헌영의 노선을 機會主義的이며 현상을 誤判하게 하는 誤謬를 犯하였다고 공격하였다. 이러한 김일성의 攻擊은 자연히 朴憲永을 추종하였던 勢力들을 소산시켰으며 끝내는 金日成에의 충성 맹세로서 귀결되게 하였다.

또 다른 한 가지의 方法은 韓國戰爭의 責任을 김일성은 박헌영에게 전가하여 박헌영과 南勞動黨系를 肅淸하였다. 이러한 조처는 北韓 社會에서 權力鬪爭의 격렬한 전개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론적인 투쟁을 통하여 金日成은 그와 敵對的인 위치에 있었던 朴憲永을 無力化하였고 나아가서 박헌영의 一派를 戰爭責任의 일차적인 當事者로 규정하여 제거함으로서 김일성의 個人的인 優位를 確立할 수 있었다.

32) 하성수, 「南勞黨史」, 세계, 1986, pp. 40~46.

민족주의적 지식인과 중산층을 제거했던 또 다른 한가지 방법은, 김일성에 의하여 이들의 경제적인 물적 기반이었던 토지를 강압적으로 탈취하는 강제적인 토지개혁의 실시였다. 民族主義的 지식인과 중산층이 주로 농촌의 지주였거나 도시의 중·소 상인이었다는 점에서 사유재산 제도의 철폐는 이들의 사회적·정치적 지위를 가속적으로 약화시켰다. 그결과 이들은 북한사회에서는 반혁명세 세력으로서의 투쟁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2. '金日成 主體思想'의 내용과 意圖的 指向[33]

1960년대의 戰後 復舊기간을 거쳐서 곧 이어 이른바 김일성 주체사상이 등장함으로서 社會主義는 이제 북한에서 金日成의 長期執權을 論理化해 주는 특이한 變容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金日成 主體思想을 설명하고 있는 북한의 한 문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金日成 동지의 빛나는 革命의 歷史는 민족적 해방을 위한 革命鬪爭으로부터 인민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共產主義 建設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의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개척한 變革의 歷史이며 유례없이 견고하였던 유격 戰爭과 現代戰爭을 통하여 가장 포악하고도 야만적인 두 개의 제국주의 즉 日本의 帝國主義와 美帝國主義에 歷史的인 참패를 안기고 정의로운 革命戰爭의 빛나는 勝利를 이룩한 투쟁의 역사이며 過去 帝國主義의 植民地였던 나라에서 세기적인 낙후와 빈궁을 가셔버리고 최단기간에 自主 自立 自衛의 사회주의 工業强國을 수립한 建設의 歷史이다."[34]

즉 이 문건에서 알 수 있듯이 金日成 主體思想의 의도는 곧 김일성의 개인 우상화를 위한 全體 住民을 强制로 動員하는 논리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의 이 논리는 김일성과 북한 사회를 일치화시키고, 나아가서

33) Han Shik Park, "Chuclie: The North Korean Ideology" in C.I. Eugenn Kim, B.C. Koh, ed. *Journey to North Korea*,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1983, pp. 84~98.

34) "우리 黨의 主體思想과 共和國政府의 對內外政策의 몇가지 問題에 대하여" p. 13.

社會主義를 金日成의 權力維持를 위한 체제로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김일성의 主體思想의 內容을 여기서 살펴 보기로 하자. 먼저 주체사상에 대한 金日成 자신의 규정을 생각해 볼 必要가 있게 된다. 이 점에 대하여 김일성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主體思想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革命과 建設의 주인은 人民大衆이며 혁명과 건설을 主動하는 힘도 인민 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運命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自身을 開拓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35]

주체 사상은 곧 개인적 自我意識에 입각한 자기 決斷과 責任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함으로서 이는 곧 一見 民族的인 次元에서는 민족 자결의 意味와도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에서는 개인은 個人으로서의 獨自性의 意味보다는 오히려 集團으로서 役割의 擔當과 그 責任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그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도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時代의 모든 革命과 建設은 民族國家를 단위로 하여 展開되며 따라서 사람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은 자기 나라에서의 革命鬪爭과 建設事業을 통하여 보장된다."[36]

바로 여기에서 金日成의 主體思想은 곧 民族 국가의 수립을 위한 일반 국민들의 感情의 고조화에 置重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즉 金日成은 "주체사상은……모든 사람들의 사고와 혁명 실천에서 자기 나라의 革命을 中心에 놓을 것을 요구합니다."[37]라고 말함으로서 그의 주장이 곧 一般 民衆의 강제적 동원을 合理化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住民動員의 感情的 고조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그는 民族國家의 建設은 곧 帝國主義에 대한 투쟁 즉 혁명의 실천에 있다고 내세우게 되었다. 혁명의

35) 金日成 저작선집, 5권 p.224.
36) 같은 책, p.225.
37) 같은 책, 6권 p.116.

意味는 이른바 社會主義 사회의 건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체사상의 核心이 될 수 밖에 없게 된다. 金日成의 이러한 認識의 具體的인 性格은 다음의 그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革命과 建設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 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事業입니다. 그러므로 自然과 社會를 개조하는 데서 自主的 立場과 創造的 活動이 요구됩니다. 우리 黨은 언제나 우리 인민의 이익, 우리 혁명의 이익으로부터 出發하여 모든 政策과 모든 路線을 자신이 獨自的으로 결정하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革命과 建設을 자신이 책임지고 해나가는 확고한 自主的 立場을 견지하였읍니다. 우리 黨은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동하여 그들 자신이 모든 可能性과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 이용하며 革命과 建設에 나서는 모든 問題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풀어 나가도록 함으로써 勝利를 쟁취할 수 있읍니다."[38]

이러한 前提에 立脚하여 김일성은 주체사상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다음의 성격을 設定하였다. 즉 思想에서의 主體, 政治에서의 自主, 經濟에서의 自立, 國防에서의 自衛가 그것이다. 이들 內容을 보다 구체적으로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상에서의 주체라는 것은 모든 勤勞者들이 높은 民族的 자부심과 自主意識을 가지고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며 모든 것을 자신의 知慧와 힘으로 자기 나라의 實情에 맞게 獨自的으로 풀어나가는 思考方式과 思想觀點을 가지도록 하는 原則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認識하여야 할 사실은 思想에서의 主體는 다른 어떠한 사상도 排擊하여야 하며 다만 金日成의 敎示만이 유일한 指針으로 받아들여져야 함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政治에서의 自主는 勞動階級의 黨과 國家가 민족자결의 權利를 正確히 행사하며 자기의 모든 政策과 路線을 作成하고 貫徹하는 데서 獨自性과 自主性을 堅持할 것을 기본요구로 제기한다. 政治的 自主性은 自主獨立國家의 첫째가는 징표이다.……정치에서의 자주는 또한 對外 政策 분야에서 完全한 平等과 相互尊重의 原則에 基礎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政治經濟的

38) 같은 책, p. 154.

관계를 맺으며 반제투쟁이나 온갖 機會主義를 반대하는 투쟁도 어디까지나 자신의 獨自的인 判斷과 信念에 기초하여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實情에 맞게 展開할 것을 요구한다"고 적고 있다.[39] 그의 주장에 의하면 政治에서의 자주는 經濟에서의 自立, 國防에서의 自衛의 원칙을 견지하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는 전제에서 이 방면의 性格을 특히 强調하였는데 이는 곧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共產黨 獨裁體制의 絶對性을 確立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論理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그들의 주장에서 읽을 수 있다. "勞動階級의 黨과 國家가 政治에서의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지 못하면 主體를 確立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기가 결심한 어떠한 혁명과 제도도 자기의 주장대로 解決할 수 없으며 사람들의 民族的 自負心과 自主意識을 높일 수도 없고 經濟的 自立과 自衛的 國防도 실현할 수 없다."[40] 이러한 주장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政治에서의 자주는 곧 全住民을 일당 지배체제 하의 强制動員的 從屬하에 놓이게 하려는 意圖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 주체 사상에서 내세우고 있는 세번째의 內容인 經濟에서의 自立은 이른바 "勞動階級의 黨과 國家가 經濟建設 분야에서 견지하여야 할 根本原則이다. 경제에서의 자립은 經濟分野에서의 自力更生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기 인민의 노동과 자기 나라의 富源으로 自立的 民族經濟를 건설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립적 민족 경제를 建設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제발로 걸어갈 수 있는 經濟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自立的 民族經濟建設은 政權을 장악한 勞階動級의 黨과 國家가 世界的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實現될 때까지 민족적 차이와 國家가 存在하는 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요구이다."[41] 이러한 논리는 북한 사회에서 경제적인 急速한 發展을 이루가 위하여 주민들을 민족이나 국가와 같

39) 북한 조선로동당대회 중요문헌집, 돌베개, 1988, p. 17.
40) 金日成 저작선집 5권, p. 176.
41) 같은 책, p. 212.

은 抽象的인 命題를 動員하여 그것에 대한 헌신을 내세워 실제 住民들의 生活條件의 가열적인 약탈을 미화하고 있다.

김일성 주체사상에서 의미하고 있는 國防에서의 자위는 이른바 政治的 獨立과 경제적 자립의 軍事的 擔保라고 말하고 있다. "國防에서의 自衛는 어떠한 외래 侵略者들의 침공에도 대처하여 자체의 힘으로 조국과 인민을 수호하고 革命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혁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튼튼한 防衛力을 建設하는 것을 말한다."[42]

이처럼 主體思想은 그 根本的인 의도 자체가 金日成 體制의 强化를 통하여 북한 사회의 전체주의적 전제사회를 構築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주장이다. 특히 北韓 住民에 대한 강제 동원적 요소는 다음과 같은 그들의 글 속에서 읽을 수 있다. "주체사상은 이와 같은 共產主義者들과 혁명적 인민들이 자기의 使命과 役割을 다하기 위한 모든 사고와 실천 투쟁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가장 科學的인 관점과 態度, 根本立場과 方法,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具現하기 위한 指導原則을 전면적으로 밝혀 주고 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主體思想은 우리시대 혁명적 世界觀의 礎石으로, 유일하게 正確한 원리적 지도 사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結論을 맺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金日成 主體思想이 一般的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사상체계와 전혀 葛藤關係에 있지 않다고 강변하면서 이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主體思想은 國際主義와 矛盾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國際主義를 强化하기 위한 것입니다."라는 김일성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는 곧 그의 주장 자체가 이른바 世界革命의 종국적인 승리는 個別國家에서의 공산주의 혁명을 成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차례 차례로 전세계의 共產化를 추구하는데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체사상은 곧 共產主義思想을 이용하여 북한에서 金日成의 個人的인 權力의 강화를 確立하고 나아가서 전체 주민을 통제하려는 意圖에서 북한 사회의 특수성

42) 같은 책, p. 237.

을 前提로 하는 일종의 全體主義的 사회주의의 受容이라고 할 수 있다.[43]

Ⅳ. 韓半島의 統合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模索

1. 統一論議의 政治的 意圖性

現實的으로 한반도에서의 統合의 문제는 언제나 南北韓 政治體制의 內面的 성격을 反影하고 있다. 통일 그 자체를 위한 진지한 民族的 統合의 次元에서의 논의보다는 정치권력의 實在的 요구 때문에 이러한 論議가 行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南北韓 兩體制에서는 또 다시 統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곧 양체제가 現實的으로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를 좀더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해진다. 현재 北韓의 境遇에는 과거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북한이, 한반도에서 보다 民族的인 정권이며 統一의 實現을 이룰 수 있는 주체적인 政權이라고 宣傳하고 있다. 이러한 선전은 자연히 그들 政權이 統一에 대해서도 前向的이며 積極的임을 보여 주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북한은 이른바 고려연방제 統一論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韓國에서의 民主主義的 政治指向에 대한 평화적 공세의 측면에서 통일논의를 정치적 宣傳의 意圖로 提示활용하고 있다.

北韓의 통일 논의는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하여 一貫性을 견지하는 것처럼 認識되고 있으며 심지어 實踐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宣傳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통일논의는 帝國主義的인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民族主義的인 주장으로까지 선전되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고려연방제는 部分的인 成功을 확보한 셈이 된다.

고려 연방제의 주장을 통하여 北韓은 김일성의 獨裁까지도 민족적인 것

43) Robert A. Scalapino and Hongkoo Lee, *North Korea in a Regional and Global Contert*,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1986, pp. 27~36.

으로 위장할 수 있었고, 그것에 의하여 한국의 일부 혁명적 과격파에게까지도 마치 그것이 統一을 이룩할 수 있는 가장 合理的인 방법인 것처럼 받아들이도록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 연방제는 實踐을 缺如한 선전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限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고려 연방제는 歷史的 經驗을 결여하고 있다. 國際政治史에서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의 異質的 체제가 聯邦을 구성한 사례도 없거니와 비록 같은 이데올로기의 국가가 연방제를 形成한 경우조차도 사회적 差等性이 내재할 경우 곧장 와해되었음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高麗 聯邦制는 그것이 종국적인 체제도 아니고 또한 최초단계의 체제도 아닌 단순히 관념적인 論理에 불과하다. 고려 연방제에 이르는 구체적인 段階도 없으며 심지어 그러한 단계로 指向할 수 있는 可能性도 결여되어 있다.

세째, 고려 연방제에서는 그것을 誘導하고 주도할 수 있는 民族 統合의 사회세력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說明을 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空虛한 주장으로 되풀이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高麗聯邦制 統一論을 주장하는 북한의 의도는 대체로 다음 몇 가지로 說明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것의 基本的인 의도는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철수를 이룩하려는데 있다. 미군의 존재는 북한에서는 가장 심각한 安全의 危脅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군의 철수가 북한의 존립을 위해서는 基本的인 要件으로 생각하고 있다. 둘째로 高麗聯邦制는 南韓에서의 반공 보수세력에 대한 理論的 공세와 동시에 反共의 명분을 弱化시키려는 意圖性이 내재되고 있다. 즉 남한에서 공산주의적인 活動을 合法化 함과 동시에 공산당의 黨的 組織까지도 부여받으려는 욕구가 그 속에 깔려 있다.

한편 韓國의 경우, 統一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세적이며 방어적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주로 다음의 두가지 事實에서 起因된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民族的 觀念에 의한 적절한 통일론을 이론적으로 提示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事情은 韓國社會에서는 그 사이에 통일에 대한 지나친 現實論이 우세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實際로는 不可能하다는 견지에서 외면되어온 결과였다. 民族의 통일이나 또 民族主義의 문제는 사실상 國家의 基本的인 思想體系임에도 不拘하고 이것을 회피했던 것은 한국의 정치 지배세력의 限界에서 기인된 현상이였다. 민족주의의 문제를 논의하면 反國家的인 理念의 주장자로 규정하였던 權力構造의 한계성이 빚어놓은 結果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統一의 문제를 민족의 최대 當面의 課題로 設定하기 보다는 近代化라던가 또는 經濟發展과 같은 문제에 置重하였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한 效果的이고 實踐的인 전략은 고사하고라도 대응적인 論理조차도 設定하지 못했다. 그 사이에 전개되었던 통일의 논리들은 政治家들의 구호적인 주장에 불과했으며 그것은 오히려 現實性이나 民族的 次元에서는 極斷的으로 무책임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가령 李承晩에 의하여 주창되었던 北進 統一論이나 朴正熙에 의하여 論議되었던 남북한 當局者에 의한 段階的 接觸論이나 그 뒤 1980년대에 주장되었던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등도 일종의 對北공세의 一環으로 제기되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이 提議는 그동안 한국에 의하여 제의된 統一案 중에서는 보다 實踐的이고 前向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자체가 일관된 民族統合의 理念이나 戰略이기 보다는 정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세째, 統一戰略이나 方案의 設定過程이 지나치게 權力의 일부 階層에 局限됨으로써 통일논의에 대한 전체 國民的인 공감대를 形成하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한국내에서 또 다른 政治的 爭點으로 변모되는 逆機能的 귀결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民族統一의 중요한 문제를 한국내의 정파나 또는 사회세력들 사이의 鬪爭이나 論爭의 구체적인 쟁점이 되게 했으며 그 결과는 감상적 統一論者의 양산은 물론이고 심지어 職

業的 통일론자의 등장까지 나타나는 현상을 招來함으로써 그만큼 사회적 혼돈을 加重시키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

2. 分斷克服의 歷史的 模型

통일의 정치적 의도성을 전제로 하면서 여기서는 한반도의 통일론의 인식적 전제로 근대세계사에서 실제 통일을 이룩한 사례에서 그 방법적 모형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역사적으로 分斷을 克服한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멀리는 독일의 통일을 고려할 수 있고 가까이는 월남에서의 전쟁에 의한 통일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統一의 歷史的 성격을 고려하면 여기에는 크게 4가지의 모형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제1의 모형으로는 獨逸 統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독일 통일의 경우는 일종의 "우월적 점유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두번째의 성격으로서는 이탈리아의 통일을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른바 民衆·民族主義 세력에 의한 買辦的 支配勢力의 축출에 대한 統一論으로서 이를 "민중 포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세번째로는 미국의 南北 戰爭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통합의 유형이다. 이 경우에는 군사적 강압에 의하여 우월한 세력이 弱者를 통합하는 과정으로서 "군사 지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의 사례로서는 오스트리아를 들 수 있는데, 현재 약소국가의 위치로 전락된 오스트리아가 분열을 극복함에 있어서 그들의 분열을 획책하였던 외국의 강대국을 상대로 하여 外交的 協商에 의해서 통일을 성취한 경우로서 "外交 協商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1) 優越的 占有 모델 : 독일의 통일

독일의 통일은 실제로 19세기의 최대의 기적이라고 설명되고 있다.[44]

44) Agatha Ramm, *Germany, 1789~1919*, London: Methuen, 1967. William Carr, *A History of Germany, 1815~1945*. London: Edward Arnold, 1979. 참조.

사실상 독일은 그당시 國際社會에서는 경제적 후발국가였으며, 나아가서 문화적으로도 이웃나라인 프랑스나 영국의 文化的 從屬性을 심하게 보여 주었다. 이와같은 후진적 사회 상황을 더한층 가열하게 조성했던 것이 수많은 公國으로의 분열현상이었다.

이러한 분열상태는 統合되지 않는 한 독일의 발전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통일은 이른바 프러시아적 국가발전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의 國家發展論은 일정한 단계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 첫번째 단계는 독일 국가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독일 民族主義的 觀念의 확립이었다. 수없이 나누어진 공국을 하나의 독일이라는 의식을 심화시키고 후진적 사회에서 先進國家로의 지향을 강조하면서 독일 민족의 발전적 영광을 강조하는 독일 民族的 意識化의 작업이 절실하게 요청되었기 때문이다.[45]

이러한 독일 民族的 自己意識의 정립을 이룩한 것이 곧 그 당시의 독일의 민족주의 학자들로서 헤르데르, 피히테, 막스 베버 등이다. 그 당시 이들 학자들은 독일 민족의 一體性 확립을 위한 논리의 체계화에 진력하였다. 독일이 分裂된 公國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後進性의 가속화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주장에서부터, 독일 민족이 하나로 결집되지 않는 한 世界史에서 독일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차지할 수 없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독일 민족주의 사상은 ① 독일의 전통적 가치가 현대에 의해서 再生되어야 하고, 그러한 재생은 독일 민족의 未來를 보장하게 된다고 생각함으로써, 傳統的 價値의 현대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② 독일의 經濟的 發展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와 같은 私有 財產制度에 의한 경쟁체제보다는, 기본적인 근간은 資本主義 體制를 전제로 한다해도 실질적으로는 國家에 의한 經濟的 支援이 전제되어야 하는 國家 先道的

45) Louis L. Snyder, *Roots of German Nationalism*, Lond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8, pp. 35~54.

經濟發展政策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인식되었다. 독일의 民族主義는 독일 문화의 고유성을 통한 민족주의적 생활양식의 실천에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④ 民族主義의 실천적 담당세력으로서 정치적으로는 軍部와 官僚를 핵심으로 하였으며, 그러한 民族主義的 관념의 전파를 위해서는 知識人 靑年 學生들의 민족적 헌신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이러한 民族主義가 정립되고 난 이후 경제적으로는 국가에 의한 전폭적인 지원이 따랐고, 정치적으로는 민족주의의 확립을 위한 공국의 통합에 관심을 모았으며, 文化的으로는 民族文化의 발전을 위하여 詩와 小說, 傳記, 동화등을 民族意識의 고취라는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民族主義的인 의식이 강력한 국가의 건설에 의해서 동원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헤겔의 國家主義的 思想體系가 형성될 수 있었고, 그러한 사상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마침내 강대한 독일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다.[46]

독일 통일의 이러한 전개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독일의 민족주의에 의한 독일 통일의 필연성을 국민들에게 인식하게 한다.

② 이러한 독일 민족주의에 의해서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할 실제적인 특정 국가의 정립을 독일 사회에서 공지시키게 되었다.

③ 독일 통일의 지향 가치를 완성하기 위하여 나누어진 공국에까지 民族主義的 文化價值의 전파를 시도하였다.

④ 이러한 民族文化의 전파시도는 마침내 靑年 學生層으로 하여금 통일된 祖國의 실현이라는 價値體系를 하나의 신념으로 정착시키게 되었다.

⑤ 청년 학생들의 國土旅行과 통일行進 등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점차 特定公國으로의 분리는 時代的으로나 民族的

46) M.J. Inwood, *Hegel: The Arguments of the Philosophers*, London: Routhedge and Kegan Paul, 1983. 제 4 장 참조. Laurence Dickey, *Hegel: Religion, Economics, and the Politics of Spirit, 1770~1807*.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7. 제 3 장 참조.

으로 반역적인 것임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⑥ 따라서 이들 공국이 統合될 경우 공국의 지배자에 대한 특정의 예우, 예를 들면 身分의 法的 保障, 財產의 保障 등 特權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조건의 제시로, 공국의 支配者들이 마침내 통합의 실천을 단행할 수 있게 되었다.

⑦ 統合된 獨逸에서 각 공국의 주민에 대해서는 특별히 差等的 待優를 하는 것이 아니라 單一的인 法, 體系에 의하여 대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⑧ 統合된 獨逸을 하나의 결속된 힘으로의 지향을 위하여 독일 민족의 세계로의 정당한 참여 욕구를 지향하게 함으로써 통일의 가치성을 확신시킬 수 있었다.

이처럼 독일의 통일에서는 특정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그 優越的인 지위에 의하여 다른 공국들을 통합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여기에는 民族主義와 같은 통합의 이데올로기가 국민적 의식의 一體化를 가져다 주었고, 그러한 民族主義的 열정을 실천할 指導勢力과 그 지도세력을 지원해줄 수 있었던 青年學生層의 활동이 기여적인 기능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民衆 包圍 모델 : 이탈리아의 통일

이탈리아는 1810년대만해도 사실상 통일을 논의할 형편이 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이탈리아는 1815년경에 8개의 서로 다른 국가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 국가는 대부분이 오스트리아에 의해서 直接 또는 間接統制를 받고 있었다.[47] 따라서 이탈리아의 통일은 국내적으로는 이들 분렬된 국가의 絶對主義的 王政體制를 붕괴시켜야 했고 대외적으로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帝國主義的 침탈을 종식시켜야 했다. 이러한 이중적인 투쟁 과정은 곧 전자는 支配階級에 대한 民衆的 抗爭이며, 후자는 帝國主義의 세력에 저항하는 民族主義의 저항이었다. 따라서 이탈리아에서의 통

47) Denis Mack Smith, *The making of Italy 1796~1870*, London: Macmillan, 1968, p. 43.

일은 民衆·民族主義의 典型을 보여주었다.

이른바 이탈리아의 통일운동은 리소지멘토((Risorgimento)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 운동이야말로 현대적인 측면에서는 19세기적인 意識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民族主義에의 헌신이며 승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리소지멘토는 2가지의 투쟁을 전개하였는데, 하나는 국내에서의 自由主義的인 사회로의 지향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었다. 가리발디와 같은 인물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이 운동은 일종의 市民革命的 性格을 가지고 있었다. 두번째의 운동의 흐름은 자연히 외국의 帝國主義的 지배자에 대한 독립 주권의 회복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탈리아의 이러한 통일운동은 마침내 부오나로티(Buonarroti)에 의하여 비밀리에 조직된 秘密結社體가 튜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운동에 진력하게 되었고, 남쪽에서는 카보나리(Carbonari)에 의한 革命運動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은 여전히 시기적인 비성숙성 때문에 다시 마찌니에 의해서 전개되었던 청년 이탈리아당 운동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운동은 이탈리아의 전국 각지에 민족주의의 의식을 고취시켜 나갔다. 그 결과 각지에서는 절대왕정에 저항하는 민중혁명이 전개되었고 그 결과 그 지역의 絶對主義的 支配者들은 외국으로 도망가거나 또는 몰락되고 말았다. 각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었던 共和國들이 마침내 카브르 가리발디등의 노력에 의하여 통일 이탈리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개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① 먼저 民族主義的 理念을 수용하여 이탈리아적 상황에 적응시킬 수 있는 논리적 再構成을 단행하였다.

② 民族主義에 입각한 청년이나 知識人들의 결사체를 전국적으로 자발적인 의지에 의하여 조직하게 하고, 이러한 조직체는 民衆的인 차원과의 접합을 시도하였다.

③ 이러한 접합 과정에서 조성된 民衆的 熱氣는 革命的인 의지로 폭발하여 그 지역의 지배자들을 축출하여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④ 共和國의 樹立過程에서 제국주의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하여 이탈리아의 전민족적 결속에 의한 抵抗意識을 고취하고, 帝國主義 세력들 사이의 갈등을 유도하였다.

⑤ 이탈리아에서 수립된 各 共和國을 民族主義的 열정에 의하여, 때로는 강압적으로 통합하였다.

이러한 이탈리아의 統合過程은 바로 民衆的인 열정과 의지의 충전에 의하여 그들 지역의 지배 세력을 外國指向의 買辦主義者들로 규정함으로써 쉽사리 민족주의적 열정을 국민들의 의식속에 심어줄 수 있었다.

3) 군사적 통합 모델 : 미국의 경우

미국의 南·北戰爭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통일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통합의 구체화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경우는 政治的인 갈등이나 支配者와 被支配者와의 갈등이 빚어진 분열현상의 統合으로서, 경제 사회적인 면에서는 이질성이 없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政治的인 면에서는 사실상 남과 북이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다만 경제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의 차이는 절대적이었다. 실제로 바로 이러한 차이는 근원적인 것이어서 타협의 실마리조차 얻어내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에서는 北部의 工業中心的 經濟構造와 남부의 裁式農業中心의 성격, 中西部 地域의 自營農 中心의 經濟構造는 서로 간에 격심한 이질성을 보여 주었다. 북부지방이 평등적인 社會認識에 의한 자유주의적 성격을 강조하였음에 비추어, 남부의 경우에는 비록 자유주의적 성격을 주장하였지만 그 내면에서는 귀족주의적인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격은 결국 黑人 奴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빚어낸 결과이었지만, 미국의 南北戰爭은 사실상 根源的인 성격을 반영하고 있었다.[48]

48) 이점에 관해서는 Barrington E. Moore, *Social Origins of Dictartorship and Democracy*, 진덕규 역,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 까치사, 1985를 참고할 것.

그뿐만 아니라 당시의 미국 남·북부에서는 노예에 대한 인식자체가 사회구조적 성격과 政治的 指向 자체를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양보나 타협도 일방의 승리를 의미하였고 타방의 완전한 지배를 뜻하였다. 이러한 갈등적인 차원은 마침내 남부의 分離主義者에 의해서 獨立國家의 선포와 함께 북부와의 전쟁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남·북전쟁에서 미국의 북부는 남부를 제압하였다. 바로 이러한 제압과정에서 평상 체제로의 복귀는 미국의 실질적인 再統合의 過程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이러한 再統合過程의 성격과 그 단계적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게된다.

① 미국의 남·북의 분열은 根源的인 것이며, 대립적인 성격을 바탕으로한 異質體制의 추구로 나타났다.

② 이러한 남·북의 갈등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軍事的인것이었지만, 그것에 의한 통합의 필연성은 經濟 社會的 葛藤의 심화를 의미하였다.

③ 따라서 통합의 과정에서는 먼저 軍事的인 展開와 함께 그것에 수반된 理念的인 면을 고취하여 남부가 反時代的인 논리의 주장자임을 대외적으로 선전하였다. 즉 남부가 反時代的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부의 군사적 행위는 人道主義的이며 自由主義的인 합리성과 價値性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④ 이러한 이념적인 공격은 외국의 세력들, 특히 프랑스 영국등에서 남부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명분상으로 妥當性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킴으로써 북부가 지원을 얻게 되었다.

⑤ 또한 中西部의 지역에 대해서도 남부의 전통적인 귀족적 사회구조의 지향이 反時代的임을 인식시킴으로써, 중서부의 북부에 대한 지원으로 나타나게 했다.

⑥ 군사적인 행위의 대상을 오직 남부 분리주의적 지도자에 국한하고, 일반 민간인에 대해서는 가능한 敵對的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⑦ 統合 以後에도 戰犯의 처리에서 보복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통합사회의 건설에 참여하게 하였다.

⑧ 북부에서의 남부에 대한 전후의 복구와 지원을 감행하였고, 나아가서는 북이 남부의 傳統的인 제도의 가능한한 지속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이처럼 북부에 의한 軍事的 조처는 승리의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었고, 그러한 군사작전에는 충분한 논리적 명분을 소유하고 있었며, 군사적 행위의 대상자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전후의 통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예비하고 있었다.

4) 統合 모델의 設定要件

위에서 제시한 각 통합모델의 사례는 모두 特定國家의 歷史的 狀況에서 기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속성을 무조건 한국의 통일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다. 오히려 보다 중요한 사실은 현실적인 韓國社會의 남북한의 상황을 고려하고 그것에 입각한 定着化의 설정을 위하여 통합의 접근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위의 역사적인 모델에서 얻을 수 있는 사실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통합의 모델에서는 통합 그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理念的인 이데올로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民族主義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民族主義를 정통성에서나 주류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점유할 수 있는 논리적인 체계의 理念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2. 統合의 모델에서는 統合以後의 사회에 대한 可能性을 실천적 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앞에서 말한 民族主義의 이데올로기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3. 통합의 실천적인 擔當勢力의 설정이 요청된다. 이러한 통합의 실천세력으로서는 일반적으로 青年 知識人들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정책적인 실천담당 세력으로서는 官僚가 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4. 통합이 體制와 體制, 國家와 國家의 성격이 전제될때는, 통합의 主導勢力이나 국가가 전체 民衆的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말하면 民衆的 支持를 결여한 統合의 試圖는 사실상 統合당하는 피동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민중적 의지의 적극적인 표출이 현존의 정치 체제를 지지하고, 그러한 지지의 열정이 통합의 民族主義的 성격으로 확대될 수 있었야 한다.

5. 統合의 過程에서는 時期的으로 비교적 장기적인 段階化가 고려되어야 한다. 즉 理念的 형성, 그 이념에 의한 일반민중의 자발적인 체제 지지, 民衆的 支持를 바탕으로 한 통합의 구체적 방안설정, 그리고 그러한 방안에 의한 통합의 시도, 마지막으로 통합 이후의 대등적인 사회구조의 형성 등이 그것이다.

6. 따라서 통합에서는 武力的인 통합의 경우에는 體制間의 적대적인 갈등이나 對決意識이 약화되지 않기 때문에 통합의 진정한 의미가 승자나 패자가 없는 모두의 승리에 있음을 고취 인식하여야 한다.

3. 統一을 위한 可能性의 前提條件

한반도의 統一問題를 구체적이고도 客觀的으로 認識할 경우 그것은 嚴格히 말하자면 사회주의와 資本主義 이데올로기의 통합에 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問題를 論議한다는 것 자체는 이 두 이데올로기가 現實的으로 일치되는 통합의 여지가 있는가의 문제로 歸結된다. 그러나 歷史的으로 이 두 이데올로기가 하나로 통합된 사례는 일찌기 어느 歷史 속에서도 찾아 볼 수 없으며 실제적인 면에서도 그러한 可能性은 期待할 수 없는 것이 分明한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前提로 할 때 韓半島의 통일은 역사상 단 한번도 事例가 없는 새로운 가능성을 模索하는 어느 의미에서는 不可能의 可能化를 추구하는 과정이 되고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統一의 문제는 서로가 敵對的인 兩大勢力 사이에 敗

北者로서의 위험부담을 가지지 않은 채 모두 함께 勝利者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도저히 現實的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提起시켜 주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의 統一問題를 現實的으로 인식할 경우 그것의 可能性은 곧 다음의 몇 가지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1. 北韓의 우세에 의한 社會主義指向의 한반도의 統一
2. 韓國의 우세에 의한 資本主義指向의 한반도의 統一
3. 旣存의 상황의 전제에 의한 南北韓의 평화 共存的 狀況
4. 특정의 理念이나 논리적 단계에 의한 남북한 兩勢力의 統合

이러한 4가지의 可能性 중에서 현재 남북한 양 당사자에 의하여 推進되고 있는 방법은 북한의 경우는 1번이고 韓國의 경우는 2번으로서 1번과 2번 사이의 對決關係가 現實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北韓에서는 주로 다음의 戰略에 관심을 두고 있다.

첫째, 북한의 統一方案인 高麗聯邦制의 實踐的이고 현실적 可能性을 擴散시키고 북한 정권의 민족적 正當性을 확립시키려 한다.

둘째, 國際社會에서 한국을 미국의 從屬國家로 인식시키고 매판적 예속자본가 지배체제로 규정하게 한다.

세째, 韓國에서의 사회적 葛藤을 造成시킴과 동시에 북한의 동조세력을 擴散시켜서 이를 利用하여 韓國社會를 分烈시키려 한다.

그러므로 북한의 통일은 곧 한국사회의 와해에 그 力點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은 자연히 다음과 같은 段階의 추진을 보여 주고 있다.

1. 理念的 優越性 확보 〈김일성 주체사상〉, 2. 韓國社會의 대내적 분열의 심화 조장 〈北韓 社會의 우수성을 宣傳하고 그것을 믿게 하는 세력의 形成〉, 3. 한반도에서의 美軍의 徹收 〈한국이 미국의 종속국가이며 미국은 帝國主義 세력임을 宣傳함〉, 4. 世界的인 차원에서 한국의 包圍 攻略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고립화를 실현함〉, 5. 高麗聯邦制와 같은 새로운 理念을 제시하고 단일 전선이나 聯合論을 개진하여 한국을 흡수 통합하려 한다.

한편 이러한 성격은 韓國의 대북한 정책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한국의 境遇에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正確하게 말한다면 1980년대 초반까지는) 北韓 社會를 고립 와해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즉 國際社會에서 고립시킨다는 것이 한국의 對北韓의 對決方案이었다. 이러한 성격이 그 뒤 한국의 經濟的 成長이 진행됨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상대적인 優越感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북한을 국제사회에 參與시킨다는 政策으로 바뀌어 졌고 북한을 開放시켜 이른바 自由의 물결을 북한사회에 흘러 들어가게 하여 사회주의의 변화를 유도하자는 인식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認識은 북한에 대한 正確한 인식의 결여에서 빚어진 政策의 단순 발상일 뿐이다. 개방시키기 위한 한국의 노력은 곧 북한의 경우에는 자본주의적 충격을 사회주의의 강고한 체제 통합의 장벽으로 극복할 수 있다. 오히려 남한의 경우 국내 체제의 통합적 한계 때문에 오히려 북한의 사상과 체제가 역류할 현상이 전개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서 북한의 개방을 전제로 하는 한국의 정책은 자기 와해의 위험부담을 안게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양체제는 모두 상대방을 國際社會에서 고립시켜서 吸收統合의 방법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韓半島의 통일은 단지 觀念의 論理로만 지속되고 있을 뿐이다.

4. 統合을 위한 政策的 考慮

지금까지 韓半島의 南·北韓의 異質的인 體制를 통합하여 단일적인 통합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가능성의 전제 조건을 살펴 보았다.

여기서는 보다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과정으로서 통합의 정책적인 성격을 고려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특정의 통합안이나 統合方法을 제시하기 보다는 그러한 案이나 政策의 설정에 요구되는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고자 한다.

1) 統合을 위한 政策構想의 原則

통합을 위한 정책을 구상함에 있어서 그것이, 戰爭과 같은 敵對的인 異民族에 대한 鬪爭의 성격이 아니라 自民族間의 異質性을 극복하여 완전한 합일적인 사회의 형성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책적 구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의 적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것은 ① 民族主義의 理念的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② 一體의 暴力的인 武力行爲를 배제하는 平和主義的인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平和政策과 民族統一의 실현을 主體的이고도 獨自的이고 自發的인 것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3가지 원칙이야말로 통일정책의 구상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민족주의에 대해서 인식하면, 물론 이 경우의 民族主義는 흔히 최근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성격의 민족주의의 이념이 아니라, 엄격한 의미에서는 한국사회의 原形的 民族主義의 실천을 의미한다. 민족주의 원형적 성격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의 민족은 하나의 통합된 민족국가를 형성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국제사회에서 모든 민족국가는 대등적인 주권국가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49] 이러한 原形的 民族主義의 이념을 전제로 하고 그밖의 정치, 사회, 경제 면에서는 民族社會의 對等的인 구성원의 福利增進과 國際社會에서의 평등적인 참여, 그리고 民族文化의 발전을 위한 노력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본주의라든가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民族主義의 下位槪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의 확립을 위하여 민족주의를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형태의 사회체제나 성격은 이미 民族主義的인 차원에서는 그 正當性을 상실한 것이 되고 만다. 물론 이러한 성격은 社會主義的인 이데올로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회주의를 위하여 民族主義가 희생된다면, 이미 그 社會主義는 國際的인 帝國主義의 논리이외의 그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게

49) E. Gellner, *Nation and Nationalism*, 이 재석 역, 민족과 민족주의, 藝河, 1988. 제 1 장 참조.

된다. 이처럼 민족주의에 대한 절대적인 인식이 전제되는 統合의 정책구상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와 같은 특정의 이데올로기적인 拘束性을 강하게 배격하게 된다.

둘째의 원칙으로 제시한 平和指向의 민족통일 접근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남·북의 分斷體制가 심각한 상호불신에 의하여 무력의 증강을 추구하는 군비경쟁을 전개하고 있음은 실제로 민족통합의 차원에서는 非民族主義的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民族의 統合을 非軍事的인 平和指向의 방법에 의하여 전개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현실적이면서도 당위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즉 平和指向의 의미는 한 체제가 다른 체제를 군사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억압하고 지배하며 합병하는 상황을 거부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平和指向의 성격은 남·북한의 이질적인 체제의 현실성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러한 체제가 발전적으로 통합되어 새로운 체제를 대등한 차원에서 형성하는 문자 그대로의 대등한 통합의 실천을 의미하게 된다.

즉 통합된 民族社會속에서는 남·북의 분단체제중에서 어느 일방의 체제가 우월적인 속성을 행사하고 다른 體制가 종속되어 있는 불평등한 상황의 조성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대등한 참여와 대등한 귀결 그리고 대등성에서의 合一的인 一體性을 구축해 가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세번째로 통합의 政策的 考慮에서 논의될 수 있는 원칙은 統合의 展開過程이 일체의 對外的인 影響力이나 主導的인 시도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한국 民族社會의 통일은 오직 한국 민족의 獨自的이고 主體的인 노력에 의해서 추구되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만일 특정의 외국 세력에 의하여 한반도의 통일문제가 주도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그 특정세력의 韓半島에서의 影響力을 고정시켜 주고 나아가서는 그러한 세력의 帝國主義的 침투를 차단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한국 민족에 의한 自發的이고 獨自的인 통일의 실현이 일체의 강대국적 영향력을 극복할 수 있는 民族的인 자각 의식이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른바 東北亞의 4강 체제도 한국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그 영향력이 종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3가지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통일 형성의 정책적인 고려만이 민족의 통합을 이념적인 차원에서나 실천적인 차원에서 모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統合政策의 內容

현재 南·北韓은 각기 통일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가령 북한에서는 이른바 高麗聯邦制를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내놓고 있다.[50] 이들 정책의 차이점을 간단히 개관할 필요가 있게 된다.

먼저 북한의 高麗聯邦制는 일종의 急進的인 통합을 모색하면서 그러한 연방제의 궁극적인 효과의 결실은 社會主義的인 통일의 실현에 두고 있다. 한편 한국의 통일정책은 실제로 段階的이면서 통일 그 자체의 실현보다는 통일을 위한 조건의 성숙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2가지의 통일 정책은 곧 상대방에 대한 실제적인 통합의 장으로의 유도와 진지하게 통일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방침이라는 논리적이고도 실질적인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다. 각 체제는 상대방의 통일방안이 그들 각자의 국제적인 지위의 격상에 의한 主導權의 장악을 전제로 한 것이며 통일에 대한 일종의 對內外的인 명분 논리에 집착하고 있다.

가령 구체적으로 남북의 분단 체제가 서로 이질적인 이데올로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聯邦政府 형태로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찾을수 없으며, 설사 통합까지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지속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제사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통일 방안의 경우에서 상호불신과 敵對的인 감정이 高潮化되어 있는 상태에서 段階的이고도 機能的인 접근은 실제로 실천적인 면에

50) 李相禹, 統一韓國의 模索, 博英社, 1987, pp. 129~160.

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한반도의 양 체제의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적 고려로서 國家聯合體制論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國家聯合體制論은 통합의 전단계적인 구상임과 동시에 통합의 궁극적인 지향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선 國家聯合體制論은 남·북한 양체제를 현존의 상태에서 상호 인정하는 현실적인 접근으로부터 시작한다. 즉 남북한의 양체제 당국자가 "南北韓 基本關係條約을 우선적으로 체결한다. 이 조약에서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① 旣存 南·北韓體制의 相互認定 ② 各 體制內部의 政治·經濟·文化의 各 領域에 대한 一體의 獨自的 決定權의 認定과 相互 불간섭주의 ③ 南·北韓間의 敵對關係의 완전제거를 위한 軍事關係協約締結, 이 협약에서는 상호간의 軍備를 減少하며, 각 體制가 그들 體制내의 安寧과 秩序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軍事力을 보유하게 한다. ④ 兩體制 代表者 회의의 설치 : 남북한 양 체제의 대표에 의해서 상설적으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代表者會議를 실시하되, 이 회의에서는 어떠한 決議도 행할 수 없고 또한 간섭이나 제약도 할 수 없게 한다. 다만 特定的인 문제들, 예를 들면 天然自源의 조사나, 철새, 文化財와 같은 民族共同關心事에 대한 논의와 그것에 대한 공동결의안의 작성을 맡는다. 이 경우에도 각 체제에 아무런 구속적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⑤ 對外的인 협력체제의 논의 : 즉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나 또는 非政治的 問題에 대한 단일팀의 구성등을 논의한다.

이와 같은 기존적 체제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南北韓 基本關係의 條約"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적대감을 해소하면서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國家聯合體制는 기본관계 조약의 체결에 의하여 어느 정도 효과적인 段階化가 가능해지게 되면 "南北韓 相互交流"의 단계로 이행한다. 이 단계에서는 經濟的인 交易이라던가 南北韓住民의 相互 訪問에 대한 문

제, 또는 學術·資料 등의 交流, 文字·言語에 대한 共同研究와 같은 非政治的이고 비이데올로기적인 문제를 연구하게 하고,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兩 體制의 해당 전문가로 하여금 研究協議會를 구성하게 한다. 이러한 연구협의회의 장소는 中立國監視委員團이 있는 板門店에서나 또는 非武裝地帶에 설치하게 한다.

이러한 협의회의 결실에 의하여 남·북한간의 왕래가 어느 정도 가능해지고 실질적인 統合意識이 형성되면 그 다음의 종국적인 단계인 "民族 統合을 위한 基本段階協議"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협의회에서는 남·북한의 既存體制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면서 同一 民族으로서의 밀접한 연관성을 상호 보완하고 확보하려는 의지의 출발에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國家聯合體制論은 그 자체가 민족의 통합을 위한 실천적인 가능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어느 일방의 승리와 타방의 패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쌍방 경쟁 체제의 성격을 확보하면서, 서로의 체제가 分斷의 상황때문에 당하고 있는 내외적인 고통을 경감해주자는데 그 구체적인 의미가 있다. 그리고 국가연합체제의 궁극적인 의도는 한반도를 중립주의적인 측면에서 통일하고 나아가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의 선택이 아닌 탈이데올로기적인 상황의 조성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3) 統合政策의 實現

국가연합체제론에 입각한 남북한의 통합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우선 한국사회에서 그것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단계적인 상황의 조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기서는 이 정책의 추구를 중심으로하여 각 단계적인 성격을 고찰하려고 한다.

먼저 통합이전의 단계로서 여기서는 聯合體制論이 제기되기 이전의 시기에서 한국에의 정책적인 지향과 대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면을 고려할 수 있다.

① 한국사회에서 먼저 民衆에 의한 민족적 설정을 구체적으로 응집할 수 있는 理念的 一體性과 그것의 政治過程的 표출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이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전체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民族主義 政治體制의 確立이 요청된다. 그러한 민주주의적 政治體制에 의해서 民衆의 열기를 民族統合의 열정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② 남한에서 통일에 관한 國民的 合意를 實際的으로 도출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통일에 관한 논의가 각양각색이어서 이들 사이에는 觀念論에서부터 實踐論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다양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의 각자의 주장을 기본적인 자료와 실증적인 상황에 입각하여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정치나 協議的인 機構의 설치가 요청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통일문제를 궁극적으로 국민적인 일체감 위에서 형성되게 하여야 한다.

③ 韓國社會에서 현재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價値配分의 不均等性의 문제라던가, 지나치게 異質性을 보여주고 있는 資本主義的 商業文化의 침투를 차단시키면서 民族文化의 건전성을 확립하게 하여야 한다.

④ 대외적인 관계에서 韓國의 主權國家로서의 民族的인 獨立性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성격의 조처로서는 우선 판문점의 남·북한 軍事會談의 대표를 한국측이 맡도록해야 하고, 한국에서의 외국군대의 주둔에 대한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⑤ 대외적으로 平和指向的인 국가의 성격을 효과적으로 파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統合移轉段階의 조처가 전개되고나면, 통합단계에서는 다음의 조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① 北韓에 대한 자극적인 비난이나 공격을 자제한다.

② 共產權의 國家들과의 交易이나 協力을 강화한다. 특히 중공과 소련에 대한 交涉의 강화는 물론이고 東歐圈에 대한 協力關係까지 광범하게 모색한다.

③ 대한민국이 민족적인 차원에서는 주류이며 北韓에 대해서는 大兄이라는 위치를 견지하여, 南·北韓間의 대결을 가능한 범위에서 피하면서, 대

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체육등의 경기에서는 정정당당히 겨루어 이기던 지던간에 북한에 대하여 격려하게 한다.

④ 북한의 중요한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격려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며, 그러한 격려가 실제로 우려와 지원의 진심임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政策的인 노력은 통일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실제로 다음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① 民族主義에 의한 統一의 理念化 問題

② 北韓의 實際的인 狀況에 관한 보다 具體的이고 實證的인 研究

③ 東北亞와 國際關係에서의 韓半島 統一問題등을 연구하고 검토하게 할 특정적인 제도화의 구상

④ 통합을 위한 국민적인 열정과 그 열정의 지지확보를 위한 노력이 집약되어야 한다.

結論 : 統合 이데올로기로서의 民族主義

이처럼 앞에서 설정한 통일론에 의한 한반도의 통일은 그것을 민족통일의 종국적인 지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다음의 두 가지의 사실을 包含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의 定立으로 模索될 수 있다. 그것은 먼저 현재의 기존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平和的인 共存體制로부터 점진적 통일을 취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社會主義와 資本主義가 모두 인정될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양체제를 克服할 수 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創設에서 그 가능성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性格을 모두 含有할 수 있는 論理로서는 곧 한국사회에서의 民族主義의 이념적 論理化에 의한 통합의 모색이 우선적으로 考慮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民族主義가 이러한 機能을 擔當할 수 있을 정도로 理論的인 體系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러한 성격의 價値體系를 함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그러

나 民族主義가 이러한 기능의 담당자로 기능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그러한 機能의 수행자이어야 한다는 當爲性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當爲的 價値體系로서 한국 민족주의는 곧 그속에 統合의 論理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韓國民族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理念的 契機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통합 이데올로기로서의 韓國民族主義의 現實性을 고찰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限界와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理論的 體系의 미정립 현상이다. 한국 민족주의는 理論的인 측면에서는 가장 初期的인 단계에 놓여있는 셈이다. 그것은 民族과 民族主義의 초보적인 개념의 구분도 不明確할 뿐 아니라 민족과 연관이 없는 것까지 민족주의의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具體的으로 傳統的 신화를 마치 민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실정이다. 그밖에 오늘의 急進的 사회세력이 주장하고 있는 민족 이데올로기는 레닌적 認識의 혁명전략에 불과하지만 이를 民族主義의 核心內容으로 수용하고 있다. 한국의 現實社會에서 이처럼 민족주의의 價値體系를 純粹한 의미에서의 민족주의와 다르게 變形되어 마침내 특정의 이데올로기로 定着시키게 된 것은 전적으로 權力占有者들의 무책임함과 반민족적 상황에 起因된 결과라 할 것이다. 권력의 지속적 점유에만 關心을 두었기 때문에 民族과는 무관한 인사들까지도 권력의 核心部位에 임명하는 작태까지 보여 주었다.

둘째로 한국민족주의의 傳統的 價値와 그것의 特殊性을 구체적으로 論理化하여 이것을 現代化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민족주의의 理論은 사실상 論理的 공동화의 상태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民族主義는 먼저 그 사회의 傳統的 특수성을 기반으로 하여 展開되며 그속에 現實的 民族社會의 욕구를 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민족주의에는 이러한 認識의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 이를 위한 인식의 기반은 곧 南韓과 北韓의 역사적 공유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에 基盤을 둔 민족주의 인식체계화의 작업이 優先的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로 한국민족주의는 現實 兩體制의 통합을 구체적인 戰略과 그 가능성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민족주의적 觀點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민족의 唯一한 正統性을 가지고 있다는 分別的 인식이 아니라 그 보다는 양체제를 民族의 次元으로 統合할 수 있는 共感的 價値體系로 정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한국의 民族主義는 南北韓 兩體制가 함께 共有할 수 있는 공약수적인 理念이어야 하고 이것은 어느 한 체제의 거부는 곧 反民族的인 결과로 指向하게 된다는 사실로까지 通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韓國民族主義는 통합된 양체제의 미래적 發展의 구체적인 戰略과 그 內容이 提示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맡게될 歷史的인 負擔과 責任의 문제와 그리고 그러한 役割의 수행을 위하여 치루어야 할 구체적인 역할을 哲學的 論理에 의하여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그 사회의 民族主義가 世界史에서의 자기 민족의 價値的 기여에 의한 새로운 社會의 實現을 모색하게 되고 그것에 의하여 全體世界의 발전이 論議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 민족주의는 現在의 이데올로기적 葛藤을 극복하고 그것을 統合된 민족 사회로서의 指向을 誘導하는 유일한 理念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는 이처럼 중요한 民族主義를 북한의 金日成의 主體思想에 의하여 침식당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無能과 無責任의 정치 지배세력에 의하여 민족의 이념을 특정 정치세력의 政治的 구호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치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한국의 민족주의는 어느 意味에서는 새로운 決斷을 내려야 할 순간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우선 韓國內의 支配勢力이 보여 주는 無原則한 정치적 작태와 民衆的 인기에 영합하려는 무능의 현실을 어떻게 민족의 이름으로 制約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민족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족다움의 의연한 意志로 지속 發展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政治만이 민족앞에 高揚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